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전병곤·이석·박동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전병곤·이석·박동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1/3년차)) KINU 연구총서 16-16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 획 · 디 자 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 978-89-8479-864-9 93340

북중 관계, 국제 관계 분석

349.11012-KDC6 / 327.519051-DDC23 CIP2016032670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ix
I. 서론	1
1. 연구배경	3
2. 기존연구 검토	5
3. 연구목적과 구성	9
II. 정치외교관계	13
1. 한중수교 이전	16
2. 갈등기(1992~1999년): 이념 및 혈맹관계의 해체	20
3. 협력기(2000~2011년): 전통우호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복원 ..	23
4. 조정기(2012년~현재): 북핵문제와 국가이익의 상호조정	33
5. 평가 및 분석	43
III. 사회문화관계	51
1. 한중수교 이전	54
2. 약화기(1992~1999년): 북한의 적극성 결여와 교류 제한 ..	60
3. 복원기(2000~2008년): 정치외교관계의 회복과 교류 확대	63
4. 강화기(2009~2012년): 사회문화교류의 전면적 심화 발전 ..	70
5. 관리기(2013년~현재): 관방교류 침체와 민간(상업성)교류 유지	79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6. 평가 및 분석	87
IV. 경제관계	97
1. 한중수교 이전	100
2. 불안정기(1992~1999년): 정치외교환경의 영향과 북중교역의 변화	104
3. 안정화기(2000~2009년): 3각 정립무역에서 북한지지 교역구조로	113
4. 전일화기(2010년~현재): 남북교역의 중단과 북중교역의 전일화	131
5. 평가 및 분석	140
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43
1. 종합평가	145
2. 정책적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7

표·그림목차

표 II-1	북중 고위층 상호방문, 1991~2000	21
표 II-2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북중 접촉	26
표 II-3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일지	32
표 II-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촉	39
표 III-1	중국 문화부가 인준한 북한 예술단체 중국 공연 내역	74
표 IV-1	북중무역 추이, 1992~2000	106
표 IV-2	북한의 국가별 곡물수입 내역, 1990~1996 (USDA 추정치) ..	109
표 IV-3	북한의 국내총생산 추이, 1992~2000	111
표 IV-4	북중무역 월별 계절성 지수의 분산 추이, 1998~2010 ..	115
표 IV-5	북한의 GDP와 성장률 추이, 2000~2010	121
표 IV-6	중국의 국가별 대외무역 추이, 2000~2010	125
표 IV-7	일본 대북제재의 무역효과 분해 결과	127
표 IV-8	북한의 대중무역적자 및 남북교역에서의 경화 수입 추이 ..	129
표 IV-9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010~2015	132
표 IV-10	북한의 대한국 수출의 대중국 수출로의 대체금액, 2010.7~2012.12	135
표 IV-11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별 기여도, 2010~2012	135
표 V-1	분야별, 시기별 북중관계의 특징	148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그림 IV-1A 북한의 대중무역 추이, 1950~1988	101
그림 IV-1B 북한무역에서의 중국 비중, 1950~1988	101
그림 IV-2 북중거래 규모 추이, 1998~2008	114
그림 IV-3 북한의 대중국 수입 월별 추이, 1998~2008	117
그림 IV-4 북한의 대중국 수출 월별 추이, 1998~2008	117
그림 IV-5A 북한의 대중국 수출 월별 추이, 2010.1~2015.12	133
그림 IV-5B 북한의 대중국 수입 월별 추이, 2010.1~2015.12	133
그림 IV-6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 추이, 2010.1~2015.12	137
그림 IV-7 중국 방문 북한인 수 추이, 2008~2015	139

본 연구의 목적은 북중관계의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발전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거시적인 흐름의 특징들을 도출해 내고, 각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는 약 67년간 전개된 전반적인 북중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북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북중 정치외교관계는 크게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로 구분된다. 갈등기는 주로 1990년대로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 등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0년대는 협력기로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북중 간 소통의 필요성 확대로 정치외교교류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의 양국 관계는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강한 국가론을 천명한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핵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이해 충돌로 인해 상호 간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사회문화관계는 정치·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외교관계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정치외교적 갈등은 사회문화교류를 약화시켰으며, 2000년대는 정치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차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으로 인한 정치관계의 일시적 경색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회문화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는 북중관계의 기본적 토대라는 전통적 특

징을 반영하여 지방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전통우호 혹은 영리적 목적을 바탕으로 지속·유지되고 있다.

경제관계 역시 시기별 부침이 있었으나, 그 원인에는 정치적 요소 외에도 국제 경제의 메커니즘이 영향을 미쳤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경제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었다. 1990년대는 불안정기로 정치외 교환경의 영향으로 북중교역의 부침이 심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는 북중교역이 급속도로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북중 경제관계는 1990년대의 요소 모두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어 나타나면서 안정화기에 진입하게 된다. 2010년 이후부터 경제관계는 북중 교역만이 유일한 변수로 남아버린 전일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중교역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의 악화(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등), 북중교역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세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 등의 요인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반응이 어우러지면서 분야별 협력과 갈등의 사이클이 순환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실 정책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 모두 북중관계의 향후 전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중관계의 변화에 종속된 소극적 대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 이면서 창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중관계, 분야별 비교, 발전 추세

Development of Sino-DPRK Rel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rend Analysis and Evaluation

Lee, Ki-Hyun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in Sino-DPRK relations with regards to political, diplomatic, socio-cultural, and economic sectors. Through this process, the macro trends of the bilateral relations were specified by combined research results of the each sector. The study examines overall Sino-DPRK relations during the last 67 yea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1992 wh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Since then, the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an be divided into three; the period of tension, cooperation, and revision. The socio-cultural relations of North Korea and China were developed in tandem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aspects due to political and historic traditions. On the contrary, economic relations showed ebb and flow over the years with global economic mechanisms playing a part. Given the shifts in US-China relation and North Korea's strategic values, a recurring cycl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for each sector is expected to occur.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be vigilant about the future developments in Sino-DPRK relations in terms of both actual policy implications and research purposes. South Korea, instead of resorting to passive way depending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should actively take the initiative for creative measures.

Keywords: Sino-DPRK Relations, Comparison by Multiple-Sectors, Development Trend

I. 서론



1. 연구배경

북중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의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북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중관계는 혈맹인가? 아니면 정상국가관계인가? 이러한 관계 설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다음으로 북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북중관계는 냉각기, 혹은 호전기라고 평가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가? 고위급 정치인의 교류가 중단되면 냉각기인가? 정치적 교류는 냉각되었는데, 경제적 교류가 잘 진행된다면 이 시기는 무엇이라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 밖에도, 북중교류 혹은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 인물 혹은 행위주체들은 누구인가? 북중관계는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교류에 있어 상호 간 영향을 받고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의문들은 기존연구들이 부분적으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는 왕왕 어려움에 봉착해왔다. 특히 북한과 중국처럼 우리와 체제가 다르고, 갈등과 대립관계를 경험 혹은 현재 진행 중이 국가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자료의 비공개성, 불투명성 등의 한계로 인해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중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북중관계가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문지상에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이벤트와 추측성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기자들은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혹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빌어서, 그 이벤트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

들을 대중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그 분석과 의미들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일까? 북중관계 이벤트의 본질적 속성 혹은 특징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분석은 추측 혹은 유추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이벤트들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면 어떨까? 일부 논자들은 왕왕 최근 이벤트와 과거 유사한 이벤트 간의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2016년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을 2013년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당시와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떨까? 물론 정보의 한계는 있겠지만, 누가 그들을 만났고, 혹은 누가 그들을 수행하였으며, 상호 면담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북중관계를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 규정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가 당대당 교류 차원인지, 아니면 정상국가관계 차원인지 혹은 유사 이벤트의 결과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차이에 따른 향후 행보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기존의 분석들보다 예측력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의 객관성을 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고는 핵무기 보유국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더구나 우리와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행보를 반대한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안 이행에 협력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 들어 북중 정치관계는 냉각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대중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역시 최악이라는 분석들이 전해진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는 여전히 교류의 흐름이 존재한다.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문화 교류가 전개되며, 관광객들도 오고 간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물자들이 매일 북중 접경지역의 철도, 고속도로, 화물선박 등을 통해 오고 간다. 밀무역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고위급 정치지도자들도

자주는 아니지만, 양국 간 전통우의를 강조하면서 서로 반가움의 포용을 한다. 과연 어떤 모습이 북중관계의 정확한 현실인 것일까?

물론 양국관계가 최악의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각 단계별 혹은 시기별로 상호 교류의 정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선, 북중 간 정치 외교, 사회문화, 경제관계가 각각 어떠한 발전 추세를 보여 왔는지에 대한 거시적 흐름의 분석이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로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교이다. 달리 말하면, 북중관계의 전반적 발전 추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그동안 추진된 북중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는 크게 냉전시기와 탈냉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 냉전시기의 북중관계 연구는 연구자료 및 정보수집, 연구시각, 연구자의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연구 인력의 측면에서는,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문화적 역량의 후진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에 초기 서구 유학파들이 귀국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북한 혹은 중국과 관련된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질이 높지 않았다. 자료 및 정보수집의 제한성은 일반연구자를 배제하고 주로 정부기관(중앙정보부·국토통일원)이 주도하는 연구로 국한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연구의 경향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연구보다 정책적 수요에 의한 공산권연구 차원에서 대적성국 대항논리개발에 치중하였다. 제한적이거나, 중국의 개

¹⁾ 이와 관련된 중국과 미국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여기서는 국내연구를 위주로 소개하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해외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시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반도 관계 차원에서 북중관계가 연구되었다.²⁾ 그러나 당시 연구는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자 부족으로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북중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

북중관계 연구에 대한 변화는 탈냉전 이후,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때 이후로 중국 현지경험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중국자료 및 정보수집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국내에서 서구 사회과학 훈련 방법의 성숙도가 제고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북중관계 연구가 시도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주제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과 영향 등이 있었다.⁴⁾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연구경향은 중국과 북한의 비교를 통한 북중관계 연구로,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경제관계 및 경제정책 비교, 통일정책에 대한 비교 등이 포함된다.⁵⁾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이 방중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한 점도 이러한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⁶⁾ 또한 북중관계를 전면적인 주제로 다루는 연구도 등장하

2) 전병근, “중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엮음,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외대출판부, 1996), pp. 19~22.

3) 이 중 의미 있는 연구로는,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1985)가 대표적이다.

4)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참조.

5) 신상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박정동,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 비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참조.

6)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변화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한상국,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3) 참조. 중국에서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李憲京·詹德斌, “中國經濟發展帶給朝鮮的啟示,”

였다. 대표적인 예로 이종석의 『북한-중국관계』를 들 수 있으며, 중국 및 미국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⁷⁾

세 번째로 중국의 북핵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분석이 북중관계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정책적·실용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주목되었다. 크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있다는 주장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⁸⁾ 일부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북한의 대중 종속을 우려하는 소위 ‘동북 4성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네 번째로 사회문화교류를 특화시킨 연구들이다. 사회문화교류는 기존 북중 관계사 연구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양국 정치관계의 변화와 사회문화교류를 단선적으로 보는 경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군사 영역보다 구체적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와 『북중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등이 있다.⁹⁾

『學海』, 第1期 (2010); 王紅信, “朝鮮經濟發展的困境與對外‘開放’的探索,” 『大眾商務』, 第2期 (2010); 郭銳·蘇紅紅, “‘朝鮮式特區經濟’與中朝邊境經濟區合作,” 『亞太經濟』, 第2期 (2013) 등이 있다.

⁷⁾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2001);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no. 115 (September, 2003), pp. 4-10; 沈志華, “面對歷史機遇: 中美關係和解與中朝關係(1971-1974),”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2014) 참조.

⁸⁾ 국내에서는 박두복,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3-22); 문흥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중소연구』, 제27권 3호 (2003) 등이 거의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최근까지 북한의 핵실험이 5차례나 진행되면서 주요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매 실험 이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진행 중이다.

I
II
III
IV
V

마지막으로, 북중 경제관계 관련 연구들이다. 경제관계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북중 경제관계 전반에 대한 역사적 개괄과 북중무역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의 연구들이 있다.¹⁰⁾ 한편, 미시적으로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보다 지역을 특정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다양한 경제 특별구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북중 양국의 투자기업들에 대한 연구, 특히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대북 투자 기업들에 대한 분석들 역시 북중 경제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처럼 탈냉전 이후의 북중관계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개발되고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시도되었고,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대상 역시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북중관계 연구에 있어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과 북중무

9)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4); 聲揚, “試論朝鮮停戰至中國文革前的中朝關係”(延邊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11) 등이 대표적이나, 이 분야 연구 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10) 북중경제관계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최수영, 『북중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7);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6) 등이 있다.

11)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연구로 전병곤 외,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15) 등이 있으며, 대북투자 및 기업 관련하여 배종렬 외,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5); 김병연 외,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등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북중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金鑫, “淺析當代中朝經貿發展(2000年至今),” 『中國商貿』, 第17期 (2014); 焦朝霞·孫娜, “構建黃金坪經濟合作區促進邊界效應轉化的實證分析,” 『對外經貿』, 第2期 (2015); 朱鈺·彭徽, “遼寧與朝鮮區域一體化問題淺析,” 『商場現代化』, 第5期 (2015) 등이 있다.

역에 관한 통계자료의 신빙성 여부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의 자료가 활용되는데, 이들 모두 중국의 무역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원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통계가 다소 허위적이거나 혹은 과장되었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북중 접경무역이나 밀무역 등은 여전히 통계 밖의 문제이다. 사회문화교류 관련 연구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자 간 교류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스컴에 노출되거나 정부 차원의 기록물(예: 연감[年鑒])로 잡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3. 연구목적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북중관계의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발전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거시적인 흐름의 특징들을 도출해 내고, 각 분야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중관계 발전 흐름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을 야기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향후 북중관계 전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전망과 우리의 외교 전략과 관련국과의 협력방안 도출에도 충분히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중관계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 연구 및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중장기적 추세를 분석하는 체계적 연구를 추구한다.

본 연구는 추세 분석을 위한 객관적 정보 획득에 주력할 것이다. 비록 북중관계의 정보 제약이 엄연한 현실이나, 점차 중국이 대북관계를 정상국가화시키는 추세이고, 미디어 및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이 정보를 수집하여 북중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북중관계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楊紹全·孫豔姝의 『當代中朝中韓關係史』¹²⁾와 劉金質·楊淮生の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949-1994)』,¹³⁾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 (1991-2006)』¹⁴⁾ 등의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최근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중국외교부·북한주재중국대사관 등 관련부서들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함께 활용할 것이며, 특히 양국 교류에 나타나는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는 「인민일보」·「로동신문」 및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추가 수집·정리함으로써 최대한 섬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DB자료는 이번 연구뿐 아니라 추후 진행될 분야별 미시·통계연구에도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약 67년간 전개된 전반적인 북중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핵심적 시기 구분은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로 설정하고 그 이후의 북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된 이유는 분석을 위한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고, 다음으로 한중수교를 전후해 북중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시기는 유사하게 구분하려 노력하였다. 큰 흐름에서 보면 한중수교가 있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크게 3단계의 시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 분야별

12) 楊紹全·孫豔姝, 『當代中朝中韓關係史』 (1-2冊) (長春: 吉林出版集團, 2013).

13) 劉金質·楊淮生,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949-1994 (1-5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14) 劉金質 外,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匯編 (1991-2006): 上』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로 시기를 설정하는 결정적인 이벤트들이 다르다는 점과, 경제 분야의 경우 무역통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기 구분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장의 서두에서 보다 자세하게 밝힐 것이고,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통계분석 등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분야별로 그 분석의 특징을 존중하는 구성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정치외교관계와 사회문화관계는 상호 연동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기술 방식에 있어 유사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각 분야별 특징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였다. 경제관계의 경우, 이벤트가 아닌 통계를 분석 도구로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들로 인해 다른 분야와 구성이 다소 이질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기술방식의 차이는 제외하고, 되도록 분야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배경 및 목적에 대한 소개에 이어 II장에서 북중 정치외교관계에 대한 발전 추세를 개관 및 분석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각각 사회문화관계와 경제관계의 발전 추세를 개관하고, 각 장의 말미에서는 각 분야별, 시기별로 나타난 특징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각 분야별, 시기별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전반적인 연구의 종합 및 I장, V장은 연구책임자인 통일연구원 이기현 연구위원, II장 정치외교관계는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III장 사회문화관계는 중국 연변대 박동훈 교수, IV장 경제관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연구위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II. 정치외교관계



본 장에서는 약 67년간 전개된 북중 정치외교관계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그 특징과 함의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 시기 구분은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로 설정하고 그 이후의 북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주된 이유는 한중수교를 전후해 북중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양국관계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양국관계를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관계의 시기 구분 역시 마찬가지로서 어느 하나의 정형화된 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에 이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국제관계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중수교의 시기 구분 역시 이러한 합의를 수용·반영한 것이다. 즉, 한중수교는 탈냉전의 영향에 따른 한국의 북방정책과 내부 위기를 수습하고 평화와 발전을 표방한 중국 전방위 외교의 결과물로서,¹⁵⁾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로 간주하며 접근하던 북중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수교 전후의 세부 시기는 북중 양국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기준은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양국의 최고지도자와 당시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개인 독재 또는 일당지배체제인 국가의 경우, 대외정책은 최고지

¹⁵⁾ 당시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의 조류에 부응해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북방외교를 추진하였고, 천안문사건에 따른 미국의 제재 및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에 의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발전 기여, 대만고립, 대미협상 카드 활용, 북한의 원조 요청 거절 등을 기대하였다.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리아, 2013), pp. 372~379.

I
II
III
IV
V

도자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결정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수교 이전 북중관계를 개관한 후,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는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의 집권기간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시기(1993~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시기(2003~2012년), 시진핑(習近平) 시기(2013~2022년)를 고려하였고, 여기에 북핵문제 등 양국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안을 반영하였다.

1. 한중수교 이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북한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직후인 10월 6일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의 공식 외교관계는 1949년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 한중수교 이전까지 약 40여 년은 사실상 냉전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북중관계는 탈냉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물론 양국관계와 수교 배경에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 오랜 교류를 통해 형성된 친밀감이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전통 이외에도 양국의 수교는 이념적 동질성과 항일 투쟁의 경험 그리고 안보와 생존을 위한 국가이익 등 수교 이전부터 유지해 온 긴밀한 교류와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특히, 1945년 이후 중국의 국공내전 시기, 북한이 국민당 집권 시안게 될 지정학적 부담과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국공산

당을 지원했던 사실도 양국 수교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¹⁶⁾ 중국 역시 건국 초기에 채택했던 대소·사회주의 일변도 대외정책과 한반도 지역의 국가안보적 위상을 배경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¹⁷⁾

이러한 양국 간 수교 배경은 초기 북중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요 밑거름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주요 동기로도 작용하였다. 중국의 참전은 양국이 미국에 공동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호 지지와 우호협력 그리고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혈맹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중 양국은 비교적 밀접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마찰과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서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대응했는데, 중소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북중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기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혈맹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중소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면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북중관계의 우호기로서 1960년대 초반까지이다. 이 시기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는 시기였고, 중소관계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북중관계도 긴밀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북중 간 혈맹관계 형성에 기폭제가 되었다. 1953년 김일성은 참전에 대한 답례 차 방중하였고, 중국은 북한의 재건을 위해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동안 약 8조 위안(元)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였다.¹⁸⁾ 중국은 1958년 북한주둔 인민해방군을

¹⁶⁾ 양국이 공식 수교한 1949년 이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2001) 참조.

¹⁷⁾ 陳峰君·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2), pp. 297~299.

¹⁸⁾ 崔誌鷹, 『大國與朝鮮半島』 (香港: 卓越出版社, 2000), p. 124.

철수시켰지만, 그 대신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방북을 통해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장기무역협정과 차관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¹⁹⁾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관계가 이완되기 시작했는데, 중국과 소련은 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 중 어느 일국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소련 모두와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고 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기 위해 중립을 유지하였다.²⁰⁾ 북한은 대외중립·자주정책을 통해 1961년 7월, 소련과 ‘북소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중국과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잇달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실리를 획득한 등거리외교의 결과였고, 이에 따라 북중관계 역시 대체로 우호적으로 전개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원기로서 19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 1964년 10월 소련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중소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중국에서는 1965년부터 좌경 이념의 영향을 받은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였다. 당시 북한은 1965년 소련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고, 1966년에도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익을 추구하였는데, 소련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중국을 교조주의자로 비난하면서 양국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69년까지 고위층 방문을 중단하였으며, 국경지역에서의 분쟁도 발생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발전기로서 1970년대 이후가 해당된다. 이 시기 중

¹⁹⁾ 金祥波, 『朝鮮對外戰略史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p. 32.

²⁰⁾ 1955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는데, 사상의 주체, 정치적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소관계 악화에 따른 중미접근이 모색되면서 국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일부 시정하기 시작하였고, 좌경 이념의 영향을 받은 대외노선도 일부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역시 북중관계의 악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에 맞춘 전방위 외교정책을 강화하였다.²¹⁾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정상화되었다.

회복되던 북중관계는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소 진전이 늦어졌다. 중국의 기존 이데올로기 재해석에 대한 북한의 이견이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과 중미수교,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개혁 개방정책, 한중 간접통상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중국과 약간의 논쟁과 갈등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 간의 이견이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소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독립자주외교노선을 채택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중소관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개혁개방정책에 주력하고 있던 중국은 북한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실제로 중국의 후야오방(胡耀邦), 화궈펑(華國鋒), 리셴넨(李先念), 양상쿤(楊尙昆) 등과 북한의 김일성, 이종욱, 연형묵 등 양국 고위층의 상호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1982년부터 1992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양국의 고위층은 방중 71회, 방북 14회 등 모두 85차례의

²¹⁾ 金祥波, 『朝鮮對外戰略史研究』, pp. 52~55.

상호방문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²²⁾ 이상에서와 같이, 1949년부터 1992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북중관계는 혈맹관계의 틀 속에서 약간의 기복은 있었으나 심각한 갈등이나 긴장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갈등기(1992~1999년): 이념 및 혈맹관계의 해체

이 시기는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까지이다.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상이한 대응과 함께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과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어지면서 양국관계에도 단절과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한중수교는 냉전기 중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 시, 중국이 한중수교 준비 상황을 북한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북한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 이후 북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수교 직후 북중 양국은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동반 감소되면서 한중수교 이전 유지되었던 긴밀한 협력 채널도 약화되었다. 구체적으로, 1992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라, 과거 물물교환 방식이 외환결제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대북 유·무상 원조와 우호가격 제공방식도 중지 내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액은 1993년 8.9억 달러, 1994년 6.2억 달러, 1995년 5.5억 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²³⁾

22) 陳峰君·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pp. 306~307.

23) 최수영 외,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향』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p. 44.

표 II-1 ▶ 북중 고위층 상호방문, 1991~2000

방문시기	방북 인사	방중 인사	
1991	5	리펑 총리	-
	6	첸치첸(錢其琛) 외교부장	-
	10	-	김일성 국가주석
1992	4	양상쿤 국가주석, 우쉐첸(吳學謙) 부총리	-
	5	딩관건(丁關根) 당서기	-
1993	7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원 초하오텐(遲浩田) 국방부장	-
	7	딩관건 정치국원	-
1994	8	-	리호경 외무성 부상
	9	-	리종옥 국가부주석
	6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 부부장	-
1995	10	-	최우진 외무성 부상
	5	-	홍성남 부총리
1996	6	-	최우진 외무성 부상
	7	뤄간(羅干) 국무원 비서장	-
	6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위원장
1999	7	-	여춘길 인민무력성 부상
	10	탕자쉬안 외교부장	-
	3	-	백남순 외무상
2000	5	-	김정일 위원장
	6	-	김일철 부위원장

출처: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 264.

이와 함께 냉전기에 빈번했던 양국의 인적교류도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1>에서 보듯이, 1991년 김일성 방중 이후 근 10년 만인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였고, 중국 역시 1992년 양상쿤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10년 만인 2001년에 장쩌민 국가주석이 방중할 때까지 양국 간 최고위층의 상호방문이 부재하였다. 고위층의 경우에도 1993년 한 중수교에 불만을 가졌던 북한을 달래기 위해 후진타오 정치국 상무위

I
II
III
IV
V

원과 츠하오텐 국방부장이 방북한 이후, 1999년 8년 만에 탕자쉬안 외교부장이 방북할 때까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 시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외교안보적 사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었고, 이어 1997년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성사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북중 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의 전략적 대화가 부재하였다는 점은 북중관계가 이전보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당시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려던 중국과 달리 북한은 냉전적 사고의 틀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북중 간 협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마찰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NPT를 탈퇴해 핵개발을 시도한 점, 한중수교에 맞대응해 북한이 대만과의 수교를 시도한 점,²⁴⁾ 1994년 7월 북한의 정전위원회 중국 대표단 철수 요구, 1997년 2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양국의 외교적 마찰 등을 들 수 있다.²⁵⁾ 특히, 황장엽 비서의 망명 이후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중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고위층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양국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1994년 8월 북한이 특사를 파견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예에서 보듯이, 북한체제의 유지 및 안전보장에 대해서

24) 당시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이 수입하는 대신 대만의 대북 식량지원 및 대표부 설치 등을 논의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廖小娟, “中共與北韓的雙邊關係: 以兩次核武危機的處理檢視,” 『展望與探索』, 第3卷, 第5期 (2005), pp. 41~42.

25) 북한은 황장엽 전 비서의 납치를 주장하며 조속한 귀환을 촉구한 반면,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한 바 있다.

는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은 대량 탈북을 방지하고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였다. 1996년 5월 홍성남 부총리의 방중을 통해, 양국은 매년 50만 톤의 식량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1998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면서 관계개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²⁶⁾

물론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북핵위기를 제어하고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곤경에 처한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개발에 필요한 안정적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였다. 즉, 북중관계에서 국가이익이 혈맹과 이념보다 우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이 시기 북중관계는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한중수교는 냉전기 이념과 혈맹으로 대표되던 북중 특수관계를 해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북중 특수관계가 전부 와해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유산으로 일부 남아 있었지만, 이때부터 북중관계는 국제환경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보편적 국가간 관계로 변화하는 과도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3. 협력기(2000~2011년): 전통우호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복원

두 번째 단계인 협력기는 2000년 이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이다. 사실 이 시기 북중관계는 관계 개선 및 강화, 관계 이완

²⁶⁾ 劉金質 外 編,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匯編 (1991-2006):上』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p. 12.

I
II
III
IV
V

및 악화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북중 양국이 상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협력이 갈등보다 우세하였고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협력기로 규정하였다.

가. 전통우호협력관계의 회복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으로 갈등을 노정하던 북중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²⁷⁾ 이러한 관계회복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과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즉,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고, 중국은 대외전략상 북한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가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절되었던 양국의 정상외교도 재개되었는데,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였고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001년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다시 방문해 상하이의 발전상을 본 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중국이 권고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개혁개방 추진을 모두 수용하였다. 한편 장쩌민 국가주석은 2001년 9월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자리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북중 간 우호협력관계를 상징하는 16자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회복시켰다.²⁸⁾

이와 같이 양국의 최고지도자 간 왕래는 양국관계의 회복과 정상화

²⁷⁾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아니지만, 1991년 김일성의 39번째 방중 이후 최고위급 인사로는 최초의 방중이어서 이 시기 북중관계의 개선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²⁸⁾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 266.

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냉전기 이념과 혁명으로 상징되는 혈맹관계로 복원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상호 갈등과 마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회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나. 북핵문제와 협력채널의 복원

북중관계가 상징적 차원에서 회복되었지만 이념이나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 역시 복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양국관계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2차 북핵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약화된 북중관계를 일부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북핵문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고려,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반대해왔다. 반면, 북한은 체제보장과 정권의 안정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유용한 수단으로서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을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는 카드로 삼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의도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의 외교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얻어

I

II

III

IV

V

내는 수완을 발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협력을 위한 고위층 인사는 물론 실무 책임자 간의 회담과 접촉이 증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채널도 확대될 수 있었다(〈표 II-2〉 참조).

표 II-2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북중 접촉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비고	
2003	3.8-9	첸치천(錢其枕) 전부총리	3자회담 참여 설득	-
	4.23-25	미·북·중 3자회담, 북경		
	7.12-15	다이빙귀(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친서전달, 6자회담 논의	북한 6자회담 참여 발표(7.31)
	8.7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개최시기, 의제 및 대표단 구성	-
	8.19	류홍차이(劉紅材)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태복 면담	-
	8.19-20	쉬차이허우(徐才厚) 군 총정치부 주임	김정일, 조명록 면담, 6자회담 논의	-
	10.30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의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재개논의, 5천달러 상당 무상경제원조	북한 6자회담 수용
	8.27-29	제1차 6자회담, 북경		
	12.25-26	왕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논의	-
	2004	1.19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면담, 비공개
2.9		김계관 외무상 부상	6자회담 및 북핵문제 논의	-
2.25-28		제2차 6자회담, 북경		
3.24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 논의	-
4.19-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유 무상원조	후진타오 등 정치국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비고	
			상무위원 전원 접견, 전통우호협력관계 재확인	
6.23-26	제3차 6자회담, 북경			
9.10-13	리창춘(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경제지원 논의	-	
10.19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경제원조, 6자회담 논의	-	
2005	2.19-23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김영남 면담, 중조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과 공동의 관심사 의견교환	-
	3.22-27	박봉주 내각총리	6자회담 및 북중 투자협정체결	-
	3.29-4.2	중국공산당 대표단	-	-
	4.5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북중 친선관계 및 핵문제	-
	4.22	후진타오, 김영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에서 접견	-	-
	5.10-14	중국공청단 대표단	친선방문	-
	5.24-28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 대표단	친선방문	-
	7.9-12	중국공산당 대표단	-	-
	7.12-14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	-
	7.25-8.7	제4차 1단계 6자회담 개최, 북경		
	8.27-29	우다웨이(武大衛)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
	9.13-19	제4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북경(9-19 공동성명)		
	10.8-11	중국정부 대표단	노동당 창건 기념일 참석	-

I
II
III
IV
V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비고
10.28-30	후진타오 국가주석	북중우호협력관계 강화, 6자회담, 경제원조	-
11.9-11	제5차 1단계 6자회담 개최, 북경		
1.10-18	김정일 위원장	북중우호협력관계 강화, 경험확대, 위폐문제 등 6자회담 입장 조율	비공식방문
3.18-28	장성택	경제시찰단	-
4.4-6	차오강천(曹剛川) 국방부장	우호협력 강화	-
2006 5.30-6.6	백남순 외무상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6자회담 재개 위한 BDA 문제 등 협력	-
7.10-15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	미사일 추가발사유예,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7.5)
10.19	탕자쉬안 국무위원	김정일 면담 통해 추가 핵실험 자제 및 6자회담 재개 조건 논의	북한 핵실험(10.9)
12.18-22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 북경		
2007 2.8-13	제5차 3단계 6자회담 개최, 북경 (2·13합의)		

출처: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p. 186~187.

특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정치 국 상무위원을 모두 접견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와의 인적관계를 강화하였다. 당대당의 관계를 복원시켰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역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자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한을 답방해 ‘전통우의를 공고화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며, 호혜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²⁹⁾ 김정일 위원장도 “조·중 친선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

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연설하였다.³⁰⁾ 이러한 강화 추세는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4번째 방중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서 양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경협을 확대할 것에 합의해 북중관계의 확대 추세가 반영되었다.³¹⁾

그러나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중관계는 다소 이완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행동을 강력 규탄함으로써,³²⁾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에도 찬성하였다. 이는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대화 위주, 제재 반대’에서 ‘대화와 제재의 병행’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북중관계도 일시적이나마 경색되었다.

다만, 핵실험 이후 중국의 역할도 ‘중재자’에서 ‘위기관리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북한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북한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갈등은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2007년 2·13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의 대북투자 및 금융거래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로 중국을 제외시켰던 사례에서 보듯이, 북중 간 갈등의 불씨는

29) “鞏固傳統友誼，加強相互信任，擴大互利合作，”『人民網』，2004.6.14.，〈<http://www.people.com.cn/BIG5/paper39/12229/1100556.html>〉. (검색일: 2016.5.31.).

30) 『조선중앙통신』，2005.10.28.

31) “應胡錦濤總書記的邀請金正日總書記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中視網』，2006.1.18.，〈<http://www.cctv.com/news/xwlb/20060118/102242.shtml>〉. (검색일: 2016.10.20.).

3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聲明，”2006.10.26.，〈http://www.fmprc.gov.cn/web/ziliaoxinwen_674904/1179_674909/t277621.shtml〉. (검색일: 2016.10.9.).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게다가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은 공식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대하고 북한의 정세 악화행위 중단 및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³³⁾ 아울러 1차 핵실험 때보다도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에 찬성하였다.

다.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강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및 북한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에 접근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9년 8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9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그리고 2010년 왕자루이(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의 연이은 방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방향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즉,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란 조사결과(5.20)가 나온 이후에도 ‘냉정과 절제’, ‘시비곡직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반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타결’ 등을 주장하며,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였다.³⁴⁾

게다가 중국은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방중은 별개’라며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리고 고위층 교류 지속,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무역협력

33)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聲明,” 2009.5.25., <http://www.fmprc.gov.cn/web/ziliaoj_674904/1179_674909/t564332.shtml>. (검색일: 2016.10.26.).

34) 전병근,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21, 2010.5.31.), p. 1.

심화, 인문교류 확대, 국제·지역협력 강화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³⁵⁾ 특히, ‘내정과 외교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에 대한 합의는 그동안 중국이 강조해왔던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다.³⁶⁾

더욱이 8월 27일 창춘(長春)에서 거행된 정상회담에서도 후진타오는 고위층 교류의 지속적 유지와 경제무역협력의 추진, 전략적 소통의 강화 등을 건의하며 양국관계의 강화를 과시하였다.³⁷⁾ 당시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원칙으로 ‘정부주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중국이 제시했던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용, 호혜공영’의 원칙에서 ‘정부인도’가 ‘정부주도’로 바뀐 것이었다. 물론 그 이후 다시 정부인도로 환원되었지만, 이 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전략적인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1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방중에서도 양국은 고위층 교류 강화, 치당치국(治黨治國)의 경험 교류, 호혜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청소년 교류 확대, 국제·지역문제 소통 강화·협조 유지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양국의 우의가 대를 이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⁸⁾ 이처럼 <표 II-3>에서와 같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방중은 북중 협력관계의 발전과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35)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對我國進行非正式訪問,” 『新華網』, 2010.5.7., <http://news.xinhuanet.com/world/2010-05/07/c_1278775.htm>. (검색일: 2016.5.7.).

36) 이는 중국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려는 시도이나 향후 북한의 전적인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 강화의 한계로도 지적된다. 배정호·박영호·전병근,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15, 2010.5.18.), pp. 10~12.

37) “胡錦濤同金正日在長春舉行會談,” 『新華網』, 2010.8.30.,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8/30/c_12500145.htm>. (검색일: 2016.9.1.).

38) “胡錦濤同金正日舉行會談,” 『人民網』, 2011.5.26., <<http://politics.people.com.cn/GB/1024/14750686.html>>. (검색일: 2016.4.1.).

표 II-3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일지

	일정	방문지	주요 목적	주요 의미(결과)
1차	2000.5.29-31	베이징	남북정상회담 사전 협의	김정일 집권 이후 최초 방중
2차	2001.1.15-20	상하이, 베이징	개혁개방 현장 답사	중국 개혁개방 성과 수용, 7·1개선조치
3차	2004.4.19-21	베이징	신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당대당 전통관계 복원, 6자회담 재개
4차	2006.1.10-18	베이징, 광저우, 우한, 주하이, 선전 등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	북한 미사일, 핵 실험 단행
5차	2010.5.3-7	베이징, 다렌, 톈진	체제지원 획득과 외교적 고립 타개	전략적 소통의 강화
6차	2010.8.26-30	장춘	경제지원 획득	경협원칙 정부주도로 수정
7차	2011.5.20-27	베이징, 동북지방	후계체제 지원 획득	치당치국의 경험 교류

출처: 전병근, “김정일 이후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개원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12.4.6.), p. 62.

이와 같이 이 시기 북중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이전 단계에서 약화되었던 북중관계도 강화되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외교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반면, 중국은 경제발전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응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핵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행위 억제제를 위한 제재에 참여함과 동시에,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과 대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단계의 북중관계는 북중 간 이념적 공감대나 혈맹, 당대당의 전통을 강조하던 사회주의적 특수관계보다 각자의 국익에 기반을 둔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 지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협력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히 거론되거나 재활용되었기 때문이다.

4. 조정기(2012년~현재): 북핵문제와 국가이익의 상호조정

조정기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18차 당대회(2012.11)를 통해 후진타오에 이어 향후 10년을 이끌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3대 세습체제가 구축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중 양국은 각자의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의 표출 속에서 협력수준을 조정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가. 시진핑과 김정은 체제의 협력모색

김정일 사망 직후 주변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중국은 가장 먼저 조의를 표하고 김정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안정과 3대 세습을 공식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후견국의 행보를 보였다. 즉, 중국은 당일 “조선인민은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계승해 김정은 동지를 지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주위에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룩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조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다음 날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³⁹⁾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원하는 구도를 선점

³⁹⁾ 당시 중국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최고 권력기관의 공동명의로 조문을 발송하였다. “中共中央電唁金正日逝世,” 『新華網』, 2011.12.19.,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12/19/c_111256970.htm>. (검색일: 2016.3.31.).

I
II
III
IV
V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전략적 소통을 통한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대외적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2012년 북미합의(2.29)에도 불구하고, 3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발표한 후, 4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비록 실패했지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양국 간 불협화음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이어 7월에 북한은 리영호 총참모장의 해임과 김정은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7.18)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를 정비하고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리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은 저우용강(周永康) 중국 중앙정법위 서기와 명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을 접견하고, 북중 우호관계의 원칙 견지, 소통 강화, 협력 심화, 다국적 범죄 공동 소탕 등을 통해 양국민의 안정적 교류 증진과 국경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 부장은 방북(7.29~31)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 및 강석주 부총리,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을 접견함으로써 북중 간 당대당의 관계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장성택 제2위원장은 방중(8.13~18)을 통해 제3차 황금평·나선시 공동개발을 위한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에 참석한 후, 후진타오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 등을 접견함으로써 북중 간 경협관계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⁴⁰⁾ 강준영 외, 『그레이트 차이나』 (서울: 대선, 2011), pp. 140~143.

나. 3차 핵실험과 북중관계의 조정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 간 북중관계를 정비하던 양국은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2013.2.12.)을 감행한데 이어 핵·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선언(2013.3.31.)함으로써 북중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뿐만 아니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증대된 자국의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 찬성한 후,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이 북한계좌를 폐쇄했으며, 9월에는 대북 수출 금지목록을 발표하였다.⁴¹⁾

이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확대된 영향력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는, 중국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심을 해소하고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북핵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견제 및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어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핵보유와 벼랑 끝 전술의 무용과 핵 포기 유도, 6자회담 복귀, 북한 변화 유도 등의 대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었다.⁴²⁾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압박과 경고를 수용하였고, 양국 간 단절되었던 소통 채널도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최룡해 특사의 방중

41) 최명해, “2013 북중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엮음, 『2013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4), pp. 207~208.

42)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0.

I
II
III
IV
V

(5.22~25)을 통해 양국 간의 이견 조율을 시도하였고, 한반도 위기 조성 행위 중단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방중(6.18~22/7.2~3)함으로써 북중 간 외교부문 전략대화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참가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표의 방중(7.2~7)에 이은 중국의 리위엔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7.25~29)하면서 김정은과의 면담도 성사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구두친서를 전달(7.25)하고 김정은의 6자회담 지지 발언을 이끌어냈다.⁴³⁾

이와 같이, 중국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유도하였고 한반도 특별사무대표인 우다웨이의 방북(8.26~30)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였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요구에 부응되지 않는 대화 재개를 주장함으로써 한·미·일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선행조치’ 요구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중 양국의 접점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9.18)에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한·미·일과의 연쇄회동을 전개하였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우다웨이의 방북(11.4~8)을 통해 6자회담 관련국과 북한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다.⁴⁴⁾ 이 과정에서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도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

그러나 회복되던 북중관계는 한미 등 국제사회와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자회담이 불발되자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북한의 장성택 숙청(2013.12)은 중국이 북한의 6자회

⁴³⁾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pp. 61~62.

⁴⁴⁾ 위의 책, pp. 61~62.

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견 조율과 협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북중경협을 총괄하던 장성택의 숙청은 그나마 유지되던 북중 소통 채널과 경협의 약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2014년 들어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2.17~20)과 우다웨이 한 반도특별사무대표의 방북(3.17~21)을 통한 6자회담과 관련 북중 간 정책협의를와 소통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의 북중관계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채널의 단절 또는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의 잦은 인사교체와 숙청은 중국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제약하였다. 게다가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음으로써 김정일 시기 유지되었던 양국 간 정책협력의 동력도 상실되었다. 더욱이 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을 통한 정상 외교는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중 간 이견 조율을 통한 협조보다 갈등과 마찰이 증가되었는데, 핵심은 비핵화 문제였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를 선친의 업적 계승이자 자신의 통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⁴⁵⁾ 게다가 북한의 입장에서 핵보유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유지, 대내 결속 및 외부 위협에도 유용한 사활적(vital) 문제였다. 다만, 민생건설을 위한 경제발전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협조가 무산되자 북한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에 접근하는 시

⁴⁵⁾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제하의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민족만대의 운명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담보를 마련하신 특출한 민족사적 공적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1.12.24.

I
II
III
IV
V

도를 하며 중국을 자극하였다.⁴⁶⁾

반면,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주변질서 형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와 맞서 핵보유를 추진하는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을 더 중시하였다. 실제로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까지의 전례를 깨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으며,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실제로 당해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일(7.11)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기념일(8.1) 행사에 양국은 친선교류를 하지 않았다. 또한 9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북한의 최룡해에 대한 의전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 대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자국 이익을 위한 양국 신 지도부의 정책 조정은 이전 단계의 북중관계와 다른 변화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북중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중관계의 개선과 북중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국익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중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중관계의 안정화도 중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가치와 대미일 관계 설정에서 북한카드의 유용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나 급변 상황의 발생 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⁴⁶⁾ 북한은 일본과 몽골, 중국 선양 등에서의 비공식 접촉과 베이징에서의 공식 회담을 가진 후, 2014년 5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서울: 통일연구원, 2014)를 참조.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20일,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에너지 거래와 경험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함으로써 북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였다. 이에 부응해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청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북중 간 고위층 소통과 협력 복원에도 불구하고, 그 해 12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된 후,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감행되면서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었다.

표 II-4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촉

방문시기	방북인사	방중인사	의제 및 비고	
2013	5.22-25	-	최룡해 특사	한반도 정세논의
	6.18-22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북중 전략대화
	7.2-3	-	김계관 외무성 부상	비핵화, 6자회담
	7.2-9	-	김성남 국제부 부장	6자회담
	7.25-29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	6자회담 지지
	8.26-30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	6자회담 재개 (김정은 면담)
	9.18	-	김계관, 리용호, 최선희	6자회담 10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11.4-8	우다웨이	-	-
2014	2.17-20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	6자회담
	3.17-21	우다웨이	-	-
	9.3	-	최룡해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5	10.9-11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	북중관계 및 정세
2016	2.2	우다웨이	-	미사일 발사 자제
	5.30-6.2	-	리수용 부위원장	7차 당대회 결과
	9.6-8	-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5차 핵실험 통지 (추정)
	9.8-9	-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5차 핵실험 통지 (추정)

출처: 저자 작성.

I
II
III
IV
V

다.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재조정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 중국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늘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안정 수호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수호는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결연히 추진하고 6자회담의 틀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다.”⁴⁷⁾

이어 중국은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에 찬성한 후, 4월 5일 그 구체적 이행조치로서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발표하였다.⁴⁸⁾ 이어 6월 14일에는 40여 개 품목과 기술을 새로 추가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도구와 관련한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북한 수출 금지’ 목록을 발표하였다.⁴⁹⁾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수출금지 목록 발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던 3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하면, 추가 조치까지 모두 3개월 만에 이루어진

47) “國際社會堅決反對朝鮮進行核試驗,” 『人民網』, 2016.1.7., <<http://hb.people.com.cn/BIG5/n2/2016/0107/c194063-27482976.html>>. (검색일: 2016.4.1.).

48)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海關總署公告2016年第11號關於對朝鮮禁運部分鑛產品清單公告,” 2016.4.5.,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검색일: 2016.7.15.).

49)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國家原子能機構,海關總署公告2016年第22號:關於增列禁止向朝鮮出口的兩用物項和技術清單公告,” 2016.6.14., <<http://www.mofcom.gov.cn/article/h/zongzhi/201606/20160601339970.shtml>>. (검색일: 2016.7.30.).

매우 빠른 조치라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대국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중국책임론’에서 벗어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제재 수단론’을 강조한 점이나,⁵⁰⁾ 북한의 민생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예외 조항을 2270호에 반영시킨 점 등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중관계를 고려하며 대북제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¹⁾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논의 제안은 중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와 김정은의 당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고도로 증시하며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⁵²⁾ 북한은 당대회 직후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및 국제부 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북한의 민생을 강조하면서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북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중 견제용으로 인식하며 반대하였다.⁵³⁾ 이에 따라

50)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1月27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2016.1.27.,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335551.shtml>. (검색일: 2016.2.3.).

5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2月26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 2016.2.26.,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343501.shtml>. (검색일: 2016.8.11.).

52) “中共中央致電祝賀朝鮮勞動黨七大召開,” 『人民日報』, 2016.5.7.; “習近平致電祝賀金正恩被推舉為朝鮮勞動黨委員長,” 『人民日報』, 2016.5.10.

사드를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인식 차이와 갈등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면서 북중관계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관계의 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9월 9일, 북한 건국절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중관계도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핵실험 직전, 최설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 및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의 방중이 핵문제에 대한 협의인지 핵실험에 대한 사전 통지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중국의 북핵 반대 의사가 조율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역시 중국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한편, 당일 즉각 외교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였다.

“오늘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안정 수호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며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굳건히 추진하고 6자회담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이다.”⁵⁴⁾

외교부 성명의 내용은 4차 북핵실험 때와 대동소이하나, ‘북한의 안

⁵³⁾ 2016년 7월 8일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는 한편, 역내 중국 안보의 전략적 이익과 균형을 훼손하는 사드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7月8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 2016.7.8.,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378698.shtml>. (검색일: 2016.7.9.)

⁵⁴⁾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9月9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 2016.9.9.,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396202.shtml>. (검색일: 2016.9.10.)

보리 관련 결의 준수' 요구와 '국제사회와 함께'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된 점은 주목된다. 이는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합의된 규범을 중시하고 이를 통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단독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5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나 한반도의 안정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비핵화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이견과 마찰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북중관계가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핵·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설정하고 대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궤도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의 중국과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각자의 정책목표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호 협력의 수준과 폭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따라 북중관계의 성격도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 및 분석

지금까지 북중관계를 한중수교 전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전개된 북중 정치외교관계를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북중관

계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변화된 측면과 지속적 측면을 모두 함유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북중관계의 평가를 시기별로 비교한 후 그 특징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시기별 비교

앞에서 분석한 대로,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북중 간 정치외교적 관계는 갈등과 협력 그리고 조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갈등기의 북중 관계는 탈냉전 및 한중수교의 여파로 냉전기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 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는 다른 두 시기에 비해 양국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갈등이 우세하였고 양국 정치교류 활동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중 양국이 갈등을 관리하려는 협력을 시도하긴 하였지만, 양국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층의 상호방문이 단절 또는 약화되면서 냉전기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갈등과 마찰, 불신을 드러냈다. 더욱이 양국 간 정책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는 한중수교의 영향과 탈북자 처리과정에 따른 북중 갈등 속에서 북한의 핵과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사안별 정책협력을 모색하는 ‘갈등 속 협력 모색’의 기간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협력기의 북중관계는 다른 두 시기에 비해 정책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평가된다. 주요 동인은 2차 북핵위기였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던 중국의 외교적 노력 속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상호 소통과 협력이 증가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도 핵을 카드 삼아 중국으로부터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책협력도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북중 양국은 최고지도자에서 중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채널이 복원·구축되었고, 심지어 양국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는 당대당의 채널까지 복원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중관계와 협력 수준은 타 시기에 비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갈등의 증가와 북한의 후계구도 안착 필요성이 결합되면서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과 소통이 긴밀해지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일시적인 경색 국면과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핵실험 후 관계경색, 경색 후 관계회복의 수순이 반복되었는데 경색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협력 기간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이 시기 북중관계는 ‘정책협력 속 갈등관리’의 성격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 해당되는 조정기의 북중관계는 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주요 정책방향도 조정됨에 따라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양국관계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 및 핵심이익의 수호를 강조하는 시진핑 정부와 핵·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설정한 김정은 체제는 각각 자국의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상대국의 정책을 조정·유도하고자 함에 따라 양국관계도 원만하게 전개되지 않고 진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북중관계는 협력기에 비해 정책협력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지만 갈등기에 비해서는 원만한 편이라 평가된다. 협력기 북중관계의 확대·강화 국면과 비교하면 조정기의 북중관계는 축소·약화 국면이지만 아직 갈등기의 단절·와해 국면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핵실험 횟수의 증가와 핵실험 주기의 단축은

북중관계의 일시적 경색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 관계 악화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북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조정’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며,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나. 특징: 지속과 변화

한중수교 이후 약 25년간에 걸친 북중관계의 특징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관계의 과도성이다. 기존 북중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형성된 혈맹관계를 들 수 있으며, 북중 간 상호원조조약을 근거로 한 동맹관계도 있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과 전통에 기반을 둔 특수관계로서 여기에는 당대당의 관계를 포함한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자주 통용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도 간혹 사용된다.

중국과 북한은 공식적으로 양국관계를 전통우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갈등을 보일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국은 북중관계를 정상국가관계로 규정한다. 북한 역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혈맹을 강조하고, 주로 당대당의 전통관계를 중시하고 또 유지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25년간 북중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평가해보면, 북중관계는 냉전기의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특수관계와 혈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호우호원조조약의 유지와 당대당 관계의 존속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이 점은 북중관계의 핵심이 아니고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잔존하면서, 각자의 국익에 따라 사안별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북중

관계의 과도적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중 양국이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전통우호협력관계는 이러한 과도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전통우호협력관계의 틀 속에서 각자의 국익에 따른 상호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둘째,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다. 25년간 북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비록 앞에서 북중 정치외교적 관계를 협력기, 갈등기로 명명하였지만, 각 시기마다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였다. 즉, 각 시기마다 북중 간에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기에는 갈등이 더 지배적이긴 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협력모색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협력기에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었는데,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수단으로 북중관계가 협력적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정기에도 양국의 신 지도부는 각자의 대내외적 목표에 따른 정책조정이 양국관계에도 반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협력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관계는 각자의 내부 사정 및 대외전략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가치 인식에 좌우된다. 북중관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은 과거 냉전시기에도 각자의 국익에 따른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⁵⁵⁾ 시진핑 시기 중국은 국내문제 해결과 지속적 부상 및 핵심 국가이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한 외부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요하며, 또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질서 형성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유지 및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 역시 제재 국면의 돌파와 경제난

⁵⁵⁾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서울: 오름, 2009).

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중관계는 상호 협력적 공간이 존재한다.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G2로의 부상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데 명실상부한 실패국가인 북한과의 관계설정은 부담이 된다. 더욱이 북한 내부의 공포정치와 잦은 핵·미사일 실험 등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지향적 외교는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며, 핵무기에 의존한 체제보장에 천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중관계는 이견과 마찰이 동반된 갈등적 측면도 깊게 내재해 있다. 따라서 갈등과 협력의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는지가 향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중관계의 영향 증대이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⁵⁶⁾ 중국은 부상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나 부상할수록 미국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대미관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핵심적 과제이다. 이러한 미중 간 협력과 경쟁관계는 중국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끼친다. 북한 역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와 그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가치 인식은 북중관계에 갈수록

⁵⁶⁾ 이러한 맥락에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논문은, 박동훈·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2015), pp. 241~259; 이정남,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pp. 143~168.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점은 앞에서 분석한 한중수교 이후의 북중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 직후 미국의 일원적·주도적 세계질서하에서 중국의 역할과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수세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이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북중관계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으로써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북중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 부상을 위해 대미관계를 안정적이고 협조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북한은 대미 위협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또 경제적 지원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중시외교로 인한 대중견제가 강화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북한 역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주변지역 안정과 관련하여 북핵문제나 북한문제는 미중 간에 협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이면서 동시에 이슈 간 상호 복합적인 연계를 형성하면서 구조화되고 있다.⁵⁷⁾ 한반도의 사드 배치문제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인으로 미중관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변인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중관계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비핵화이다. 북중 간에는 상호 이견과 인식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 이외에도 미사일, 평화체제, 남북관계, 통일, 탈북

⁵⁷⁾ 이러한 중국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으로는 다음 참조. 馬方方, “論中國周邊安全中的中美‘分歧管控,’” 『和平與發展』, 第6期 (2015), pp. 15~27.

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과정 역시 북중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북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슈는 비핵화 문제이며, 향후에도 이 문제는 북중관계에 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중 양국의 이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으며 핵개발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중 간의 조정 및 마찰의 여지는 크다. 실제로 북핵문제는 그동안 북중관계의 협력과 갈등에 깊은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였다. 중국이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접근할 경우 북중관계는 악화될 소지가 있는 반면, 북한의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접근할 경우 북중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분간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한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현 미중관계의 구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감행되더라도 북중관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기본 틀 자체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Ⅲ. 사회문화관계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체제특성상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강하다. 북중 양국은 냉전 초기부터 공산주의적 국제주의 이념 및 반제투쟁 운동에 기반을 두고 국가이익을 초월하면서까지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도 정치·경제관계 못지않게 양국관계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북중관계가 협력-갈등-협력을 반복해오면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문화교류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하지만 북중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양국 정치관계 변화와 사회문화교류 간의 관계를 너무 단선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북중 양국이 정치관계의 변화과정 속에서 양자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계복원을 위한 양국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된 협력 틀의 경로의존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냉전시기 형성된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의 전통 또는 기본양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양국 교류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들여다 볼 때, 양국의 전통관계 변화에 대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북중 사회문화교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왕왕 사회문화교류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인적교류부터 정부교류, 그리고 경제기술교류부터 친척방문 등, 사회문화교류의 범위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소위 사회문화 영역이라고 통칭되는 분야들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내용들은 주로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 관련 정식 협정 체결과 고위급 인사 교류, 예술단체 교류, 영화부문 교류, 전시회, 교육·과학기술 부문 교류, 출판·언론 부문 교류 등이다. 물론 이 밖에도 체육이나 관광 관련 분야 등의 교류가

I
II
III
IV
V

있을 수 있으나,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나는 방대한 이벤트들을 단기간에 집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기적 흐름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집적 가능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다 종합적인 연구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시기 구분은 한중수교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한중수교 이후는 사회문화교류의 부침에 따라 크게 약화기, 복원기, 강화기, 관리기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정치외교 분야와 다른 차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급전환으로 인해 사회문화교류가 급증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시기를 부득이 1단계 추가,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한중수교 이전

가.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1950년대 중소 갈등을 경험하면서 북중 양국은 정치·군사동맹으로 발전했고, ‘전통적 우의’ 또한 보다 돈독해지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복구건설을 위해 김일성은 구소련으로부터 10억 루블 규모의 대북지원을 약속받았지만, 3년 포화 속에서 황폐화된 북한을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1953년 11월 12일 김일성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특히 북중교류의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는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1953.11.23.)은 ‘양국의 전통적 전투적 우의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조약의 형식으로 고착’⁵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⁵⁸⁾ 『人民日報』, 1954.11.14.

동 협정 체결당시⁵⁹⁾ 「조선 기술자 중국 실습 및 조선 근무 중국 기술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이후 조선 철도 복구와 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의정서」, 「조선학생의 중국 대학 및 중등전문학교 학습에 관한 협정」 등이 함께 체결되면서, 양국 간 경제·기술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들이 초보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경제무역과 관련된 일련의 협약들이 체결된 데 이어, 「북중 우정(郵政)협정」(1954.9, 1957.6), 「북중 전신(電信) 협정」(1957.6), 「북중 방송사업 협력 협정」(1956.8), 「북중 과학기술협력 협정」(1957.12), 「북중 항공운수 협정」(1959.2), 「북중 문화협력 협정」(1959.2) 등 쌍방 사회문화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연이어 마련되었다. 특히 1959년에 체결된 「북중 문화협력 협정」은 1953년 11월에 이미 체결되었던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을 토대로 문화·교육·과학·위생·체육·방송·신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 북중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사회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고, 관련 협약에 따라 해마다 기본 집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북중 사회문화교류의 기본내용과 특징

그렇다면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추진

⁵⁹⁾ 동 협정에 따르면 첫째, 체결 쌍방은 우호 호조와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경제 및 기술적 지원과 협력, 그리고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둘째, 협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양자 경제·무역·교통·문화·교육 등 각 분야 기관들 간에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셋째, 유효기간은 10년, 체결 쌍방 어느 한쪽에서 1년 전 폐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였다.

되었을까? 양국 사회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인프라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1953년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중교류는 쌍방이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추진되었다. 이른바 북중 간 사회문화교류의 전통이 형성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양국 관련 부문들 간에 체결되는 교류협정에 근거하여 계획에 따라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전통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정부 각 부처 외에 기타 사회단체도 관방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에 의해 주도(계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국 정부 대표단은 1~2년을 단위로 기존의 협력내용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류협력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언론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예술단체들의 상호교류이다. 전통사회주의체제에서 문화예술은 단지 유희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치이념의 전파 매체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선전부(宣傳部) 또는 선전선동부 등 당 기관이 직접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였고, 문화예술의 계급성·당성의 원칙을 전제로 사상성이 중요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 간 문화예술교류는 이념적인 공감대 형성과 이에 기반을 둔 양국 간 전통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양국은 수백명 규모의 예술대표단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2~3개월간 순회공연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일부 중요 행사에는 북중 주요 지도자 또는 중앙관료들이 대표단을 접견하거나,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방식으로 친선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셋째, 출판·언론기관 간 교류협력이다. 체제 특성상 출판·언론기관

은 국가의 정책방침에 대한 홍보 및 이념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정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일화된 언론구조를 통해 자국의 대외정책 및 상대국에 대한 기본입장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언론 영역 역시 양자 교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언론기관 간 교류도 국가적 차원의 중시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출판물 교환 및 상대국 주요 도서들에 대한 번역출판 등 출판기관 간 교류협력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양국은 상대국을 소재로 한 정치서적과 ‘북중우의’를 노래하는 에세이 등 대량의 문학작품들을 상호 번역·출판하였다.

넷째, 예술영화 교류이다. 1949년부터 1954년 10월까지 북한에 소개된 중국 영화는 총 46종 330부에 달하였다고 한다.⁶⁰⁾ 그 이후 양국은 상호 각각 영화주간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상대국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1960년 8월 북한 광복 15주년을 기념하여 영화주간을 개최하고 「정각 아홉시」, 「단결의 노래」 등 북한 영화를 상영하였고, 같은 해 10월 북한도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영화주간을 개최하여 약 40부의 중국영화를 상영하였다. 1963년 10월 중국 저우언라이 국무총리가 김일성에 기증한 천연색 영화 「홍루몽(紅樓夢)」과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가 저우언라이 총리에 기증한 영화 「홍색선전원」은 각각 예술단체들에 의해 각색되어 상대국에서 공연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교육·학술 분야 교류이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언어 분야 인재양성을 취지로 베이징대 동방언어문학학과와 연변대, 낙양(洛陽) 군사외국어학원 등에 조선어 전공을 설립하였다. 1964년 5월, 국제문

⁶⁰⁾ 황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소개된 중국인민의 문학예술,” 『신조선』, 6월호 (1955), p. 15.

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에 관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철학사회과학연구소 산하에 조선(북한)연구실을 설립하면서 '조선학(북한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육·학술 분야 인적교류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상기 문화예술 분야 교류 외에도 상대국 문화를 서로 알리기 위한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미술, 촬영, 공예 등 다양한 영역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형성되었다.

다. 정치적 변동과 사회문화교류의 변화

북중 사회문화교류의 정부 주도적 특징은 양국 간의 전략노선 및 대외정책의 변화, 즉 정치관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중단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중소 갈등 속에서 애초 중국에 손을 들어주었던 북한이 점차 구소련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폭발로 극좌적 외교노선을 전개하면서 북중관계는 거의 빙점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정치·군사적 교류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고, 심지어 1965년부터 1969년 사이에는 문화 관련 협정마저 체결되지 않았다.

극단으로 치닫던 북중관계는 1969년부터 점차 회복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미소관계가 완화모드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은 프예블루호 사건(1968.1.2.) 등 일련의 북미 갈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중소 갈등이 1969년 진보도 사건으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북·중·소 3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이 외교 영역에서의 극좌적 노선을 바로잡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로 나서면서 북중관계는 서서히 복원단계에 들어섰다. 1970년 4월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7년 만에 북중 간 총리급 상호 방문이 재개되었다. 양국은 ‘북중 양국 인민들의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우호적 단결을 진일보 공고히 하는 것은 양국 공동사업과 이익에 부합되며, … 각 영역 상호협력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킬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호 대표단 파견 등 각종 사회문화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면서 이는 북중 간 사회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이 이념보다는 경제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대외정책 측면에서도 패러다임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이념적 요인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점차 ‘국가의 실정에 맞게 대외 지원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⁶¹⁾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관계도 더이상 전통 사회주의 국가들 간 교류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양국 각 부문 간 상호교류 집행계획서가 정기적으로 체결되었고 또한 이런 계획에 근거하여 해마다 수십 개의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는 전통은 유지되었지만, 그 규모와 정도는 1980년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요약하면, 20세기 중반 복잡한 국내외적 정세 속에서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를 구축하면서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예술·언론·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문화교류는 나름대로의 정치·경제적 협력과 함께 양국 간 협력과 발전을 추동하는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비록 1960년대 후반 노선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화교류

⁶¹⁾ 1982년,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 중국이 1억 달러의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한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북원조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방증할 수 있다.

I
II
III
IV
V

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념과 전략 이익이 상호 얽히면서 양국은 가급적으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체제 특성상 사회문화교류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정치관계 변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2. 약화기(1992~1999년): 북한의 적극성 결여와 교류 제한

1992년 한중수교는 북중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물론 한중수교로 인해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우려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당·정(黨政)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문화교류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비록 한중수교로 인해 북중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양국 친선협회 등 우호기구 및 국가 관련 부서들의 주도로 양국의 주요 기념일 또는 명절 기념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양국 건국일, 정전협정 체결일,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일, 북중문화협력협정 체결일 등의 기념일에 연회 혹은 영화 초대회 형식의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1993년 2월에는 중국 문화부 천창번(陳昌本)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천련옥 부위원장과 1993~1994년 문화교류계획을 체결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과학·교육·문화예술·신문출판 등 영역에서 총 100여 개의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기로 약속하였고, 대학(원)생·연수생 및 교사 상호파견과 잡지·도서·영상자료 등에 대한 교류도 포함되었다. 같은 해 9월 25일, 중국 문화부장 리우충더(劉忠德)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정부 문화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김일성 주석이 이들을 접견하기도 하였다.

예술대표단 상호파견 횟수는 어찌 보면 북중 정치관계 변화의 중요한 바로미터(barometer)였다. 1960~1970년대 빈번하게 추진되었던 예술대표단 교류는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비록 횟수는 줄었지만, 예술대표단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다. 1993년 7월 북한 전승기념일(정전협정체결일)에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8월 중국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김일성이 직접 이들 공연을 관람하면서 ‘북중 두 나라 우의를 세세대대로 승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⁶²⁾ 관계개선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1993년 12월 북한도 마오쩌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예술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⁶³⁾ 이는 북한이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예술단을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서 중국도 장쩌민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부주석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북중 간 전통적 우의가 변함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⁶⁴⁾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북중 관계는 다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록 1995년 왕재산 경음악단 방중 시장쩌민 주석이 직접 관람하며 북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 이후 몇 년간 중국이 북한 ‘4월의 예술축전’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북한이 그 어떤 예술단을 중국에 파견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중관계가 약화기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교육·과학기술 및 언론 부분의 교류였다. 1992년 10월 중국과학원과 북한과학원 간에 1993~1994년 과학협력 계획에 관한 협의서가 체결되었다. 협의서에 따라 양 기관은 학자교류,

62) 『人民日報』, 1993.8.25.

63) 이는 북한이 한중수교 이후로 처음으로 예술단을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평가된다.

64) 『人民日報』, 1993.12.27.

연구경험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였고, 중국과학원은 북한과학원이 파견한 연수생들을 위탁 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은 북중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업, 화학공업, 건축, 환경 등 영역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3년 3월에는 북한 고등교육부 제1부상 송재성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교육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교육위원회와 1993~1994년 교육교류 및 협력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보아 교육 영역의 교류도 일정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국 주요 언론사 간 교류도 정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예컨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쉰스(求是)」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인 「근로자」 등 양국 국가 및 정당기관 주요 저널들 간의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졌고, 양국 기자회견 및 기타 방송 부문 주요 기관들 간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중수교, 김일성 사망, 후계자 김정일의 은둔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중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다시피 한중수교 이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예술단체 활동은 총 2차례에 불과하였다. 또한 양자오취안(楊昭全) 등 학자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번역 출판한 북한 도서는 『동학정의』 등 총 2편에 불과하였다.⁶⁵⁾ 실제 1997~1998년 문화교류계획서를 통해 약속된 교류항목도 총 40여 종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아 북중 사회문화교류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⁶⁵⁾ 楊紹全·孫豔姝, 『當代中朝中韓關係史』, pp. 297~706.

3. 복원기(2000~2008년): 정치외교관계의 회복과 교류 확대

한중수교로 냉각상태에 접어든 북중관계는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1999년 김영남의 중국 방문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을 추진하면서 북중 쌍방은 ‘전통승계,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2005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강화되면서 사회문화교류도 활성화되었다. 이에 힘입어 2005년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 인원이 12.5만 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⁶⁶⁾ 이 시기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교류계획서의 지속적 체결과 고위급 인사 간 교류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2003~200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체결된 데 이어, 2006년 4월에는 평양에서 「북중 두 나라 정부 사이의 2006~2008년도 문화교류 집행계획서」가 체결되었다. 2006년의 경우 중국 문화부 부장조리 덩웨이(丁偉)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전현찬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하였다. 이 계획서에 근거하여 2008년의 경우 총 68개 단체가 상호 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연인차로 1,472명에 달한다.⁶⁷⁾ 그 외, 2007년 9월 중국 문화부 저우허핑(周和平) 부부장(차관)

⁶⁶⁾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96.

I
II
III
IV
V

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형섭과 회동하는 등 사회문화 부문 고위급 인사 교류도 밀접하게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북중 경제문화협정 체결, 북중 문화협정 체결,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등 주요 행사들을 기념하는 연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방식으로 고위급 인사들 간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나. 예술단체 교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 「4월의 봄 예술축전」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해왔고, 이러한 행사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상하이 발레단, 2004년에는 국가교향악단, 2005년에는 항저우 가무단과 네이멍구 교예단이 대표단을 구성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2005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항저우 가무단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 문화부의 위촉을 받고 중국 장쑤성(江蘇省) 문화청(廳) 주관으로 장쑤 예술대표단 69명이 4월 축제에 참석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중국 30대 ‘문화기업’ 중 하나인 ‘중국대외문화그룹(中國對外文化集團)’의 주관하에 허베이성(河北省) 가무단과 산둥성(山東省) 교예단 81명으로 구성된 예술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4월 17일 허베이성 가무단 공연에는 북한주재 중국대사의 초청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리용무 차수, 최태복 비서 등 북한 당정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 외에 2008년 10월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여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정치부 문공단 대형현

67) 中國駐朝大使館, “駐朝鮮大使劉曉明舉行‘中朝文化合作協定’簽訂50周年紀念招待會,” 2009.2.19., <<http://kp.china-embassy.org/chn/zcgx/whjyyjl/2009whjl/t538392.htm>>. (검색일, 2016.8.10.).

대무용극 ‘홍매찬(紅梅贊)’이 평양에서 공연되었다. 이 공연에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등 북한 주요 관료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북한도 이 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예술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1월 북한 문화성 초청으로 베이징 화창형제문화오락유한회사(華唱兄弟文化娛樂有限公司) 총경리 허징빈(何景斌)을 단장으로 한 문화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2008년 가극 「꽃파는 처녀」를 중국에서 공연하기로 합의한 뒤, 2008년 4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172명 규모의 피바다 가극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김일성 주석 탄생일인 4월 15일 베이징 국가대극장에서 진행된 첫 공연에는 당시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류윈산(劉雲山)이 직접 공연을 관람하였다. 2007년 베이아오대형문화체육활동유한회사(北奧大型文化體育活動有限公司)의 초청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북한 메스게임(집단체조) 무대 지휘자인 장은산 등 5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네이명구 자치구 성립 60주년’ 경축 메스게임 공연 준비에 협력하였다. 2008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상하이국제문화교류유한회사 초청으로 평양교예단 50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다. 영화 부문 교류

북중 간 영화 부문 교류는 주로 북한이 주최하는 「평양국제영화축전」을 통해 진행되었다. 북한은 1987년부터 2년을 주기로 「블러블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 영화축전」을 개최해왔고, 2004년부터는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북한이 개최하는 유일한 국제영화축제라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중국은 1992년부터 이 영화제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해마다 10편 내외의 중국영화를 평양에서 상영하였다. 2006년의 경우 중국은 국내 해방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태항산에서(太行山上)」와 중국 농촌사회 생활을 반영한 「따뜻한 봄(暖春)」, 홍콩영화 「소림축구(少林足球)」 등 10편의 영화를 이 축제에 출품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국 농촌사회의 생활을 소재로 한 영화 「따뜻한 봄」이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영화제작사는 동 영화를 김정일 위원장에 증정하기도 하였다. 2007년 1월 16일 북한은 김영남, 최태복, 양형섭, 김기남, 김영대, 로두철 등 중앙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3000명 규모의 「따뜻한 봄」 영화 초대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10월 제1차 북핵 실험 직후 경색된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호적 제스처가 사회 문화적 영역을 통해서도 취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8년 개최된 제11차 평양국제영화제에서는 총 42개국 110여 편의 영화가 선정된 가운데 29편의 영화가 경쟁부문에 참여했고, 이 중 중국영화는 11편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서 중국 국내전쟁과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중국 영화 「집결호(集結号)」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라. 전시회 활동

1959년 체결된 「북중문화교류협정」에는 “상대국을 서로 알리기 위한 문화 활동 전개”와 “상대국 문화·교육·과학 등 영역의 성과전시회를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형성된 전시회 활동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중국이 북한에서 주최한 전시회로는 중국미술전시회, 중국유화전시회, 중국수예전시회, 중국수채화전시회, 중국 중청년화가 작품전시회 등이 포함

된다. 북한도 정권수립일(9.9)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7.27),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일(10.25), 문화협정체결일(2.21) 등 중요 기념일마다 대사관 또는 북중 친선협회, 북중 우호협회 등 사회단체들 주도하에 양국 문화예술인·사회단체 지도자·교육자·체육인·출판인들을 초청하여 기념연회, 각종 전시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주로 북한 공예품 전시회, 김일성 노작 및 혁명 활동 그림(사진)전시회, 수공예품전시회 등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예컨대 북한은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를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개최하였고, 같은 해 10월 개최된 베이징 국제예술박람회에도 북한 미술작품들을 전시하였다. 2008년 9월 18일, 중국도 양국 문화부(성)의 주최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미술전’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마. 교육·과학기술 부문 교류

교육 부문에서도 대표단·유학생·교수 등 여러 형태의 인적교류가 진행되었다. 2002년 11월 북한 교육상 변영립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교육부 천즈리(陳至立) 부장(장관)과 「북중 2002~2010년 교육교류 및 협력 협의서」를 채택하였다. 동 협의서에 따라 대학 및 자매학교들 간 교류가 거의 해마다 추진되었고, 유학생 교류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중국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북한이 파견한 중국 유학생은 총 671명(장기 유학생 642명, 단기 유학 29명), 2005년은 756명(장기 664명, 단기 92명)⁶⁸⁾이었고, 2008년에는 장기 유학생 703명,

⁶⁸⁾ 外交部政策研究司,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p. 522; 外交部政策研究司,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p. 596.

단기 유학생 174명 등 총 877명으로 나타났다.⁶⁹⁾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북중 양국은 1957년에 「북중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2년 현재까지 총 38회의 북중과학기술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다. 2002년 5월 14일 중국 과학기술부 우중저(吳忠澤) 부장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학원 부원장 박승채와 북중 과학기술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쌍방은 과학기술 협력 집행현황을 검토하고 추후 바이오, 농업, 석유화학, 기계자동화 및 광산채굴 등 영역에서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2007년 북중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과학기술부 청진페이(程津培)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이성욱 북한과학원 부원장과 제42차 과학기술협력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정부는 2008년으로 만기되는 과학기술 관련 도서·잡지 지원기한을 5년간 지속적으로 연장하였고 지원 규모도 인민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늘렸다.⁷⁰⁾

바. 출판·언론 부문 교류

양국 출판언론 기관들 간 교류는 북중관계가 경색기에 처해 있던 1990년대에도 거의 해마다 진행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까지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다. 그동안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널

69)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877명,” 『연합뉴스』, 2008.7.22.,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6.8.12.).

70) 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部, “中朝科技合作聯委會第四十二屆會議在平壤舉行,” 2007.12.20., <http://www.most.gov.cn/hzs/gzdt/200712/t20071220_57960.htm>. (검색일: 2016.08.12.).

인 「츄스(求是)」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인 「근로자」 등 양국 국가 및 정당기관 주요 저널들 간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졌고, 양국 기자회견 및 기타 방송 부문 주요기관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양국 정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로동신문」의 상호교류가 가장 밀접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 인민일보사의 초청으로 노동신문 대표단이 거의 해마다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부위원장 부허(布赫), 장춘윈(姜春云), 2003년 당시 중국공산당 선전부장을 맡고 있던 류윈산(劉云山) 등 정치국 위원들이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북중관계가 복원단계에 들어선 2005년, 2006년 당시 인민일보사 대표단은 노동신문사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 노동당 중앙 최태복 비서와 김영남 위원장은 접견 중에 북중친선관계에 발전에 있어서의 양 기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2002년 7월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초청으로 중국 중화전국신문일군협회 리춘허우(李存厚)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기자회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북한 노동당 중앙비서 정하철이 이들을 접견하였다.

2003년에도 중화전국기자협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기자동맹과 중화전국기자협회 간 친선협조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 중국 국가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방송총국 대표단, 북한 출판지도국 대표단 등 대표단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 방송언론 분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였다.

I
II
III
IV
V

4. 강화기(2009~2012년): 사회문화교류의 전면적 심화 발전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중국은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소통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으로 후계체제 구축이 의사 일정에 올랐고, 또한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도 중국의 정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기 북중 양국은 상당한 의욕을 갖고 협력관계를 광범위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물론 2009년이 바로 북중수교 60주년이라는 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북중 간에 추진된 사회문화적 교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교류계획서 체결 및 고위급 대표단 교류

2009년은 북중수교 60주년이자 양국 문화교류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로 축전을 보내어 2009년 ‘북중우호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계기로 북중 간 사회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9년 2월 20일,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문재철 위원장, 문화성 한철 부상 및 문화·위생·출판, 체육, 방송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중 문화협력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를 이어 2009년 2월 26일에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문재철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제23번째 「북중 문화교류계획서(2009~2011)」를 체결하였다. 2009년 3월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장에서 개최된 ‘북중우호의 해’ 개막식에는 원자바오(溫家宝) 중국 총리와 북한 김영일 총리가 200명 규모의 북중 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양국 간 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시 표출되었으나, 10월 4일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여 경제원조 및 기술·교육 분야 지원, 관광산업 개발 등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사회문화교류 전환의 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 2010년 이후 북중 국경지대 경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가운데 사회문화교류 역시 열기를 잃지 않았다. 2010년 9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초청으로 중국 문화부 대외연락국 동진신(董俊新)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문화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준비 중인 중국 고전작 「양산백과 축영대(梁山伯与祝英台)」 공연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2010년 12월 28일에는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주최로 북한 내각부총리 강능수, 노동신문 총편집 김기룡,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등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절맞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나. 예술단체 교류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예술단체 교류는 북중 사회문화 교류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시기 방대한 예술대표단을 북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파견하였다. 2009년 「북중우호의 해」를 맞으면서 중국 문화부는 중국대외문화고

I

II

III

IV

V

를 주관하여 문화일보사, 상하이 교향악단, 산둥성 교예단, 상하이 교예단, 지린성 경극원(京劇院) 등 단체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총 154명 규모의 예술대표단을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파견하였다. 2011년 제27차 예술축전에도 지린성 교향악단, 중국 교예단 등 단체를 포함하여 총 135명 규모의 예술대표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진행하였고, 2012년 28차 축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국 가무단과 중국 교예단으로 구성된 198명 규모의 예술대표단이 파견되었다.

한편, 북한 예술단의 중국 파견은 주로 세 가지 형태를 띠었다. 첫째, 중국이 주최하는 국제예술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문화부가 주최하는 아시아예술축전, 중국 문화부와 허베이성(河北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차오(五橋) 국제교예축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왔다.

둘째, 「홍루몽(紅樓夢)」, 「량산백과 축영대(梁山伯與祝英台)」 등 중국 고전명작들을 북한식으로 재창작하여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2008년 중국 사회에서도 익숙히 알려져 있는 북한 가극 「꽃파는 처녀」가 중국에서 순회공연된 이후, 2009년부터 약 1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북한 피바다 가극단이 각색한 중국 고전작 「홍루몽(紅樓夢)」이 중국에서 공연되었다. 북한은 이 공연을 위해 200명 규모의 예술대표단을 구성하였고, 중국 내 13개 도시를 돌며 총 37차의 순회공연을 진행, 관람객 수는 연인차로 약 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⁷¹⁾ 순회공연이 처음 시작된 5월에는 당시 중국 중앙정치국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 등 중국 중앙관료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⁷²⁾

71) 駐朝中國大使館, “中國對外文化集團公司感謝信,” 2010.8.2., <<http://www.fmprc.gov.cn/ce/cekp/chn/sgxx/hyb/t651701.htm>>. (검색일: 2016.8.15.).

북한 예술단의 중국에서의 대형공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또 다른 고전작 「량산백과 축영대」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북한식 대형가극으로 재창작되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북한은 약 3개월간 중국 15개 도시를 돌며 30여 차의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31일자 공연에는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楊潔篪)가 부인을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하였다.⁷³⁾ 이를 이어 2012년 5월에는 피바다 가극단 「꽃파는 처녀」가 4년 만에 다시 중국 16개 도시를 돌며 30여 차의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셋째, 공연들이 기념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영리 목적도 함께 띠고 있었다. 2009년 중국 문화부가 직접 인준한 북한 예술단체의 중국 내 공연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특히 행사 대부분이 중국 내 예술 공연 기획사들의 주관으로 추진되었고,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씩 중국에 체류하며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북중 문화교류 차원으로 추진되었지만 대부분 상업적 이익 활동 성격이 짙었음을 말해 준다.

72) 특히 가극 「홍루몽」은 북중 사회문화교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 방문 시 중국 월극(越劇) 「홍루몽」을 처음 관람했고, 1963년 중국이 첫 채색영화 「홍루몽」을 김일성에게 증정한 바 있다. 이후 김일성이 북한 예술단에 지시하여 북한판 「홍루몽」이 각색되어 북한에서 공연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2009년 「북중우호의 해」를 맞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북한식 「홍루몽」 각색을 지시하면서 재창작되어 북한 내에서 90여 회 공연되었고, 중국 원자바오(溫家宝) 총리,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시에도 「홍루몽」을 공연함으로써 북중관계 우호의 상징이 되었다.

73) “兩個‘梁祝’相聚在同一屋簷下,” 『中國文化報』, 2012.1.10.

I
II
III
IV
V

표 III-1 중국 문화부가 인준한 북한 예술단체 중국 공연 내역

초청기관	북한 예술단체	인원수	방문일시
湖北楚天演出有限公司	평양예술단	35人	2009.8.29.-11.30.
浙江省杭州演出有限公司	평양모란봉교예단	56人	2009.10.15.-12.31.
遼寧省演出公司	평양교예단	50人	2010.3.20.-4.20.
湖北楚天演出有限公司	평양예술단	38人	2011.5.2.-8.30.
黑龍江省文化藝術發展中心	평양마술단	18人	2011.6.1.-7.30.
湖南城鄉行文化藝術有限公司	평양교예단	40人	2011.10.-2012.3.
北京華唱兄弟文化娛樂有限公司	조선피바다가극단	175人	2012.5.28.-7.28.

출처: 中國文化部, <<http://www.mcprc.gov.cn/>>. (검색일: 2016.8.5.).

다. 영화 부문 교류

2009년 북중수교 60주년 및 ‘북중우호의 해’를 맞으며 양국은 상대국 영화주간도 개최하였다. 2009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영화위원회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베이징에서 영화주간을 개최하여, 중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꽃파는 처녀」 등 5부의 작품들을 상영하였다. 이어 같은 달 28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는 중국영화주간이 열렸다. 2010년 10월에는 북한주재 중국대사관과 북한 국가영화위원회 공동주최로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영화주간」이 북한에서 개최되었다.

영화주간 행사 및 방송 관련 부문 간 교류와 함께 영화제작 및 드라마 방송 등 분야에서도 양국은 밀접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 「마오안잉」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고, 2010년 북한에서 시사회를 갖고 방영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기획된 북중 영화계 첫 공동작품인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도 2012년 4월과 6월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시사회를 가졌다. 특히 북한은 동 영화 제작을 위해 이미 공연이 끝난 메스게임 ‘아리랑’ 참가자 10만 명을 다시 불러들이고 철거했던 공연 장치를 다시 설치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중국 드라마 「잠복(潛伏)」 등 드라마 및 영화작품들도 북한에서 인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부문 교류 외에도 양국 방송기관 간의 협력도 이 시기 밀접하게 전개되었다. 예컨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북한 중앙방송위원회와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영화총국, 남방(광둥)매스미디어그룹(南方廣播影視傳媒集團) 등 기관 간의 교류가 빈번하게 추진되면서 방송분야 교류와 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북한 조선중앙TV방송 변화의 시점이 20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밀접한 교류 및 지원에 힘입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⁷⁴⁾

라. 각종 전시회 활동

그림(사진) 전시회도 2009년 ‘북중우호의 해’를 계기로 빈번히 개최되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북한 제2차 핵실험으로 주춤했던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을 전후로 재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9월 7일, 북중수교 60주년과 북한정권 수립 61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와 북한 북중우호협회가 공동주최한 「북중우호: 중국미술작품전」이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

⁷⁴⁾ 2012년 9월 26일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 국가방송영화TV총국 부국장 리웨이(李偉)를 접견하면서 중국측이 선진설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기술인원 강습, 드라마 프로그램 제공 등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에 합의한바 있다. 駐朝中國大使館, “中國國家廣播電總局代表團訪問朝鮮,” 2012.9.26., <<http://www.fmprc.gov.cn/ce/cekp/chn/zcgsx/whjyyjl/t975044.htm>>. (검색일: 2016.7.8.).

는 전영진 부위원장, 북한주재 중국대사 류샤오밍(劉曉明), 중국국제 우호연락회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를 이어 2009년 9월 29일에는 중국 문화부와 북한 문화성이 공동주최하는 「중북수교 60주년 기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사진·미술전」이 베이징에서, 「북중수교 60주년 기념: 중화인민공화국 유화전시회」가 평양에서 같은 날 동시에 개최되었다. 중국 문화부 짜오사오화(趙少華) 부부장과 북한 문화성 한철 부상이 각각 행사에 참석하였다. 2010년에 들어서도 그림(사진)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 5월 22~25일, 중국 상하이 대외문화교류협회 및 조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공동주최하는 「북중우호: 양국 소년아동 서예·미술전」이 중국 복리회(福利會) 소년궁에서 개최되었고, 2010년 9월 27일에는 중국 문화부가 지원하는 「중국 당대 국화전(國畫展)」과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소개하는 사진전이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마. 교육·과학기술교류

2009년 10월, 북중 양국은 「중국 교육부와 북한 교육성 간의 2010-2020년도 교육교류 및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교육대표단 교류, 유학생 교류, 교원 상호 파견 등의 다양한 협력이 포함되었다. 협의에 따라 중국은 약 450개 교육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해마다 평양외국어대학에 2명의 중국어강사를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북한 평양외대, 김일성종합대, 인민경제대, 김책공업종합대 등 중문학과 중국어 교사 30여 명을 초청하여 6주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북한 중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인민대 학습당에서 매년 6개월을 주

기로 북한 주민 500~600여 명을 상대로 중국어 강의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2006년부터 시작된 ‘한어교(漢語橋)’ 세계중학생 중문 경진대회 일환으로 해마다 평양에서 중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다.

이 밖에도 북중 대학 및 연구소들 간 협력 및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9년, 중국 교육부 국제협력사와 북한 교육성 고등교육국 후원 하에 중국 지린대학(吉林大學)의 주최로 베이징대, 하얼빈대, 동북사범대, 란저우대(蘭州大), 다롄이공대(大連理工大) 등 중국 대학들과 북한 김일성종합대, 평양과기대, 김책공업대 등 10개 대학들이 참여하는 북중 대학총장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2010년 9월에는 북한 교육위원회와 북중우호협회 주최로 중국 칭화대, 푸단대, 중산대, 난카이대 등 13개 대학총장 및 대표들과 북한 김일성종합대, 김책공업대, 김형직사범대 등 11개 대학들 총장 및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학총장포럼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2010년 이후로 총장포럼이 개최되지 않았지만, 동 포럼은 양국 대학들 간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대학 대표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6월 김형직사범대의 홍일천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 동북사범대 및 산둥, 베이징 등 교육기관들을 방문하여 중국의 사범교육 발전현황을 탐방한 데 이어, 같은 달 북한 교육성 김영인 부상을 단장으로 북한 각 대학 책임자들로 구성된 북한 대학총장대표단 일행 60명이 중국 베이징대, 공자학원 본부, 랴오닝대(遼寧大) 등 대학과 기관들을 방문하였다. 북한 교육대표단의 중국방문은 주로 중국교육발전현황 탐방과 인적교류, 학술교류를 강화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일부 대학들 간에는 신규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북중 사회문화교류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 협력도 유지되어 왔다. 예컨대, 중국 길림울문중학과 북한 창덕중학, 베이

징 제5중학과 평양 제1중학, 라오닝 무송실험소학교와 북한 김성주소 학교 간에는 전통적으로 친선관계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길림울문중학교는 양국 지도자 합의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명의 북한 중학생을 초청하여 3년간 교육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기관 외에 연구기관들 간 기술교류도 추진되었다. 예컨대 북중 과학기술 협력 제45차 연합위원회 의정서에 따라, 2012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북한 정부과학기술대표단이 중국 석탄과학연구총원 탕산(唐山) 분원을 방문하였고,⁷⁵⁾ 2012년 8월 북한 국가질량관리국 최광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일행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을 방문하여 2010~2012년도 표준화, 계량 및 질량관리, 검험검역 및 인증·인가제 등 세 개 영역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⁷⁶⁾

바. 출판언론 부문 교류

이 시기 북중 양국은 출판 및 언론기관들 간의 협력도 빈번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출판기관 간 교류이다. 양국 간 문화교류집행 계획서에 따라, 2009년 중국외국어출판발행사업국(中國外文出版發行事業局) 저우밍웨이(周明偉)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외문출판사(外文出版社)와 도서출판발행 및 외

75) “朝鮮科技代表團至煤炭科學研究總院唐山分院洽談交流,” 『中國振動機械網』, 2012.10.25., <<http://coal.in-en.com/html/coal-1599059.shtml>>. (검색일: 2016.7.9.)

76)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王勇會見朝鮮國家質量管理局局長崔光來一行,” 2012.10.20., <http://www.aqsq.gov.cn/jgfl/gjhzs/tzdt/201210/t20121016_250735.htm>. (검색일: 20106.8.7.)

국어 서적 출판에 관한 협력 강화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0년 5월에도 북한 외문출판사 최경국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으며 2012년 4월 중국 외국어출판발행사업국 저우밍웨이 국장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면서 중국 외문국과 북한 노동당중앙외문출판사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양국 간에 체결된 출판 및 인쇄 영역 교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중국 신문출판총서의 초청으로 북한 출판지도국 인쇄출판대표단이 2009년 12월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출판인쇄 기술, 설비와 생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 측과 협의하였고,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출판사와 인쇄공장을 탐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및 기자협회 간 교류도 밀접하게 추진되었다. 2012년 5월, 평양신문사 총편집 송락균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신문기자단이 ‘중국문화체제 개혁 현황’이라는 주제를 갖고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기간 대표단은 협력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국기자협회와 중국 문화부, 경제일보사, 베이징일보사 및 상하이, 항저우 등 지역 언론매체 및 문화단체들과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중국 문화체제 개혁 및 중국사회 발전현황에 대해 학습하였다.⁷⁷⁾

5. 관리기(2013년~현재): 관방교류 침체와 민간(상업성) 교류 유지

2013년 북한 제3차 핵실험으로 양국 정치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고위급 인사 교류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⁷⁷⁾ “中國記協祝壽臣書記會見朝鮮新聞代表團,” 『中國記協網』, 2012.5.29., <http://news.xinhuanet.com/zgjsx/2012-05/29/c_131618221.htm>. (검색일: 2016.8.7.).

안정과 북한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12월부터 일련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북중관계는 새로운 경색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어떤 형태로 유지되었을까?

가. 문화교류계획서 체결 및 고위급 대표단 교류

북한 핵실험 이후인 2013년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 52주년 기념식, 「북중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 등 행사들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의 주최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2014년까지의 북중 문화교류협정서가 새롭게 체결되었으나,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고, 북한주재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 차원에서 약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북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 문화부가 대표단을 별도로 파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중관계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 예술단체 교류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예술단체 교류는 2013년 북한 핵실험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로 몇몇 국제 예술·교예전에 북한 예술단체들이 참석한 사례를 빼고는 북한 예술단체의 중국 순방공연은 전무하다. 2013년 1월 5일부터 북한 국립민족

예술단이 약 한 달간 중국 9개 도시를 돌며 순회공연을 하였지만 이 역시 핵실험 이전에 추진된 행사였으며,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행한 2013년 2월 이후로는 대규모 예술단체를 파견하였다는 관련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북중관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던 그 해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결국 ‘관련 부서 간 소통의 문제’로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다.

중국 예술대표단의 북한과의 교류 역시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2014년 제29차 북한예술축전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은 100명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심지어 2016년 30차 예술축전에는 재중동포 예술단 수 명 외에는 중국 대표단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⁷⁸⁾

다. 영화 부문 교류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간 영화 및 방송계 상호교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이 제14차 평양국제영화제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제외하면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양자 간에 영화나 드라마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왔는지에 관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각종 전시회 활동

북중 간 각종 전시활동은 최근 몇 해에 들어서면서 기념활동 성격을

⁷⁸⁾ 2016년 북한 노동신문을 살펴보면 재중동포 대표단 소개 외에 중국 예술대표단 방문 및 관련행사 소식이 없었고, 중국 언론들도 북한이 제30차 친선예술축전을 개최하였다는 소식 외에 중국 대표단 파견 상황을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년 1월 북한 제4차 핵실험 여파로 중국이 예술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I
II
III
IV
V

핀 행사보다 영리적 성격을 띤 전시회로 변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라오닝위원회와 라오닝 대외우호협회, 단둥시(丹東市) 지방정부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中朝經貿文化旅遊博覽會)를 예로 들 수 있다. 단둥시(丹東市)는 북중경협의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5년까지 해마다 동 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박람회는 상품전시·경제 무역상담·문화교류·관광협력 등 네 개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은 매 회마다 100여 개 기업 대표들과 100여 명 예술인원들을 포함한 300~500여 명 규모 대표단을 단둥시에 파견하였다. 민족복장·식품·의약보건·전자제품·건축자재·농업상품·광산 및 화공제품 등 1,000여 종 전시품들을 140여 개 부스를 통해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공연, 경제 및 무역상담, 북중 경관사진전시회 등 1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2016년 제5차 박람회 역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⁷⁹⁾

둘째, 북한과 중국 내 기업들 간에 추진되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들 수 있다. 2013년 6월 북한 대외전시총국의 주최하에 베이징 대천삼화 국제문화전매공사(大千三和國際文化傳媒公司) 등 서예·미술작품 경매를 경영하는 기획사들의 주관으로 「북중우의 문화예술교류 및 미술작품 전시회」가 베이징·저장성(浙江省) 등지를 순회하며 추진되었다. 동 전시회에는 북한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의 미술작품 수백 여 폭이 전시되었다.⁸⁰⁾ 2013년 7월에는 북한 주선양 총영사관과 중국 무단장시(牡丹江市)가 공동 주최한 북한 미술작품 대형전시회가 15일간 개최된 바 있다. 동 전시회에는 조선화, 조선유화를 포함해 총 220

79) 『朝日新聞』, 2016.7.21.

80) “中朝文化書畫藝術交流展,” 『中國包裝網』, 2013.8.13., <<http://news.pack.cn/hzxx/hzdt/20130813/173905.shtml>>. (검색일: 2016.7.21.).

여 폭의 북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이 중 1980~1990년대에 창작된 일부 북한 유명 예술인들의 작품의 경매가격이 수십만 위안에 이르렀다고 한다.⁸¹⁾ 2014년에도 북한 대외전시총국이 주최하는 북중 문화예술교류전시회가 베이징 등지에서 진행되었고, 2015년에 들어서서는 아예 중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예컨대, 2015년 1월, 상하이시 방송매체인 동방넷(東方網)은 북한과 협력하여 양국 교류와 이해 및 소통을 증진한다는 취지하에 상하이시에 북중예술교류창작기지(中朝藝術交流中心創作基地)를 설립하였다. 북한 당대 예술작품들을 홍보하고, 또한 북한 내 최고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문화교류 및 예술창작 등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²⁾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 창작기지는 2015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인민·공훈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조선화가의 붓을 통해 본 상하이’라는 주제로 약 두 달간의 창작활동을 벌여 총 50여 폭의 그림을 완성하였다고 한다.⁸³⁾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25일에는 랴오닝성 단둥시에 북중문화전시관이 개관하였다. 약 3만 여 ㎡의 면적에 달하는 전시관은 북한 예술품 창작·전시 및 민속문화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20세기 이래 북한 당대 유명 예술가들의 미술작품, 자수, 사진, 조각상 등 예술작품들이 1만 건 이상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⁸⁴⁾ 요컨대, 북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

81) “中朝官方首次共同舉辦朝鮮畫展，朝方力推藝術交流,” 『中國新聞網』, 2013.7.23., <<http://www.chinanews.com/cul/2013/07-23/5075980.shtml>>. (검색일: 2016.7.21.).

82) “中朝藝術交流中心創作基地隆重揭牌,” 『東方文創網』, 2015.1.9., <<http://shcci.eastday.com/c/20150112/u1ai8533542.html>>. (검색일: 2016.7.21.).

83) “朝鮮國家級畫家代表團訪滬，筆下繪就‘別樣魔都’,” 『東方文創網』, 2015.7.15., <http://collection.eastday.com/c/n970131/u1ai8795851_K9217.html>. (검색일: 2016.7.21.).

84) “中朝文化展覽館在遼寧丹東開館,” 『華夏經緯網』, 2015.10.26., <<http://www.huaxia.com/zhwh/wjhl/4596842.html>>. (검색일: 2016.7.21.).

서 북한은 주로 중국 기업 및 지방정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북한 예술 작품들을 홍보함과 동시에 북한예술의 특성과 중국사회의 정서를 결부시킨 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점차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술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중국은 2년마다 개최되는 평양국제과학기술 도서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9월 10일에 개최된 제8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시회가 북한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되었고 북한 최태복 중앙비서, 대외문화위원회 김정숙 위원장 등 북한 대표들과 북한주재 중국대사, 중국 신문출판총서(總署) 부서장 등이 개막식에 공동으로 참석한 바 있다. 2014년 9월 16일 개막된 제9차 전시회에도 중국이 참석하였는데 동 전시회를 위해 중국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위탁으로 중국 교육도서수출입유한회사(中國教育圖書進出口有限公司)가 중국 측 부스를 주관하였다. 인문사회 및 공농업과학기술, 전자정보 등 영역의 도서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과학기술 보급도서들이 총 1,900여 권 전시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기증되었다.

마. 교육·과학기술 부문 교류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가 경색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예술단 파견 및 영화부문 교류 등 영역들이 대폭 축소되던데 반해, 교육 및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교류는 그나마 일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학들과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 연변대는 2008년부터 개최하는 「두만강포럼」에 2016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북한 학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또한 중국 농업

과학원과 선양농업대 농업과학기술 전문가들이 2015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농업과학기술자들과 벼 재배, 버섯 양식, 수산물 양식 등 실용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북한 김일성종합대, 조선농업과학원, 조선 벼재배연구소 등 농업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⁸⁵⁾ 그 외에도 중국과학원과 북한과학원 사이에도 교류협력이 정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예컨대 2014년 7월, 북한 과학원 잔디연구분원 8명 전문가들이 중국과학원을 방문하여 7일간 단기연수를 진행한 바 있고, 중국과학원 지질 및 지구물리연구소도 조선과학원 지질연구소와의 교류협력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⁸⁶⁾

연구기관들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볼 경우, 중국과학기술협회와 북한 과학기술총연맹 간에 체결한 과학기술협력계획서에 따라 북한 케이블 생산기술대표단이 2014년 6월 중국 더양(德陽)시를 시찰한 바 있다.⁸⁷⁾ 2014년 6월, 마원춘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방위원회 설계국 대표단 일행 21명이 베이징 전자과학기술직업학원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관리, 정보화 관리 등 선진 경험들을 학습하였고,⁸⁸⁾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박호용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이징 환경보호국을 방문하여, 환경보호 관련 정책법규, 관리정책 등을 시찰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몇 해 동안의 교육·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85) “中朝舉行農業實用技術交流研討會,” 『中國新聞網』, 2015.11.10., <<http://www.chinanews.com/tp/hd2011/2015/11-10/580168.shtml>>. (검색일: 2016.7.21.).

86) “朝鮮國家科學院地學代表團訪問地質地球所,” 『中國科學院網頁』, 2014.5.26., <http://www.cas.cn/hzjl/gjil/hzdt/201405/t20140526_4126801.shtml>. (검색일: 2016.7.21.).

87) “朝鮮電線生產技術代表團一行到我市考察交流,” 『德陽市科普資源網』, 2014.6.30., <<http://www.dykpw.org.cn/s/102/t/358/57/eb/info22507.htm>>. (검색일: 2016.7.21.).

88) “馬元春率朝鮮設計局代表團6月訪問中國,” 『中國高校之窗』, 2014.6.27., <http://news.ifeng.com/a/20140627/40925621_0.shtml>. (검색일: 2016.7.21.).

의례적인 대표단 상호방문보다는 현실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 학자들의 방문과 학습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로 양 중앙정부 간에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지방정부 내지는 민간 분야를 파고들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바. 언론 부문 교류

북핵실험으로 북중 간 전략적 이해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관계 관리적 차원에서 언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양국 언론 간 교류는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북중 언론기관 교류는 양자 간의 기나긴 전통을 배경으로 2013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6월 25일,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리혁성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신문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장기적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기자협회와 교류를 진행하였다. 방문단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경공업 발전 및 신농촌건설 현황’에 대해 시찰하는 것이었다. 방문단은 중국 베이징일보, 티엔진일보(天津日報), 티엔진 TV방송국, 랴오닝일보(遼寧日報) 등과 교류하였고, 랴오닝성 농업발전 및 신농촌 건설 추진현황 등에 관심을 보였다.⁸⁹⁾ 2013년 11월 1일에는 북한 노동신문 부총편집 김원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중앙선전부 류치바오(劉奇葆) 부장

⁸⁹⁾ “朝鮮新聞代表團結束訪華回國” 『中國記協網』, 2013.7.1., <http://news.xinhuanet.com/zgjx/2013-07/01/c_132501822.htm>. (검색일: 2016.7.21.).

이 이들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2014년 5월 20일,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전일광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신문 대표단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사, 조선기자동맹 등 기관 인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중 목적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에 대한 시찰이었다. 이들은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중국기자협회, 베이징일보사, 해방일보사, 신화사 등 베이징 지역 주요 언론사들과 티엔진, 상하이, 난징 등 기타 도시 언론사들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유무역지대로 선정된 티엔진빈하이신구(天津濱海新區) 건설현장을 시찰하였다. 2015년 5월, 북한 중앙방송위원회TV방송사 백봉선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신문 대표단 일행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 역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이해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방문단은 중국기자협회, 광명일보사, 광명넷, 인민일보사, 인민넷, 광둥공업설계원 등 언론사들을 방문함과 동시에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한다.⁹⁰⁾ 이 외에도 2015년 8월에는 후베이성(湖北省) 기자협회 주석 원청귀(文成國)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언론 대표단 일행 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후베이성 기자협회, 남방신문미디어그룹(南方報業傳媒集團), 법제일보사 등 중국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중국 신문 대표단이 북한 기자 대표단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6. 평가 및 분석

앞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냉전기까지의 북중 사회문화교류를 개

⁹⁰⁾ 『朝鮮新聞代表團結束訪華回國』 『中國記協網』, 2015.6.1., <http://news.xinhuanet.com/zgix/2015-06/01/c_134287816.htm>. (검색일: 2016.7.21.).

관하고, 한중수교 이후 북중 사회문화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어져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정치노선, 대외정책 등 정치외교관계적 측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문화교류는 굴곡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60여 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형성해 왔다. 북중 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 북중 사회문화교류와 정치외교관계의 상관성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양자 정치외교관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특히 냉전시기가 더 그러하였다. 전통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사회문화교류라 하여도 관방에 의해 주도되는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북중 정치관계의 변화는 사회문화교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중 양국은 '공산주의 위업,' 반제투쟁이라는 이념적 공감대와 국제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문화교류도 가장 밀접하게 전개되던 시기를 경험하였다. 양국은 문화협력협정 및 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체결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교류를 전개하였다. 비록 1960년대 후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문화협정 및 계획서마저 체결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 그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교류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양국은 가급적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정상들 간 교류가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문화관계 역시 복원되었다. 물론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양자관계가 다시 주춤했

지만 사회문화교류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주요 명절이나 기념일 행사, 각자 개최하고 있던 국제문화행사 외에 기타 문화교류 활동들도 지속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양자관계 관리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된다. 2009년 북중수교 60주년, 「북중 문화협력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으며 양국은 ‘북중우호의 해’를 선언하였다.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북중 갈등이 일시적으로 심화되었지만, 9월과 10월에 들어서면서 각종 기념행사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북중 양국은 한동안 경제협력과 더불어 사회문화교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양국은 거의 200명 규모에 이르는 대형 예술단을 상호 파견하여 순회공연을 진행했고,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를 빈번하게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출판·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사건은 북중 사회문화관계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였고, 당시 추진되어 왔던 대규모 예술행사들도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 주최하에 「북중우호협력조약」 체결기념식 등 기념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북중 문화협력교류협정도 재체결되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성 예술행사는 줄었지만, 교육·과학기술·언론 등 분야에서 교류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중수교, 북핵문제 심화 등 북중 정치관계의 변화는 사회문화교류의 규모와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사회문

I

II

III

IV

V

화교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비록 정치적 갈등을 반복하여 겪으면서도 양자관계 관리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는 줄곧 그 맥락을 이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50년대부터 형성된 사회문화의 기본 틀과 형식을 이어오면서 양자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특징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북중 사회문화교류가 이어져 온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북중 간 사회문화교류는 60여 년이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북중 양국이 강조하는 이른바 ‘전통’은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냉전시기 공산주의 실현과 반제투쟁이라는 공통된 이념하에 북중 간에는 정치적 ‘혈맹관계’를 토대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의 틀과 내용을 구성해왔다. 심지어 일반 정상국가들 간 관계 이상으로 밀접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문화교류는 예술·교육·출판·언론·영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으며, 중앙정부 간의 정기적인 문화교류 협정 및 각 부처들 간의 구체적인 교류협정을 맺고 그 협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왕래가 전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중 사회문화관계도 이러한 기본 틀이 유지되었다. 정전 기념일, 당 창건 기념일, 건국 기념일, 「북중 문화협력 협정」 체결 기념일 등에 정기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라 하겠다.

나. 대북 관리 vs 실용적 접근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북중 간 사회문화교류를 중시하는 데는 북한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고려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 요인에 대한 고려이다.

탈냉전 이후 북중관계는 이념적, 정치적, 지도자 개인의 유대관계가 퇴색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냉전 구도가 남아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미중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체제 붕괴 시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시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중국식 기능주의 사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지지할 것이라 표명하면서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의 협력원칙을 제시하였다. 협력은 하되 시장원칙에 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의 대외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중 사회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중국정부는 북한이 가장 기피하는 개혁개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 예컨대 2010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중심노선, 대외개방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요소라고 김정일 위원장에 직접 거론했었고, 원자바오 총리도 ‘기꺼이 개혁개방 경험을 소개할 의사가 있음’을 김정일에게 직접 밝힌 바 있다. 즉 북중 간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북한의 대외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사회문화교류 유지는 중요하였다. 북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⁹¹⁾ 이러한 점을

⁹¹⁾ 북한언론은 “조선반도는 강대국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해소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격동의 동북아시아, 조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 『조선신보』, 2014.7.2.

I
II
III
IV
V

이용하여 북한은 핵실험으로 고립된 국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외적 창구인 중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핵문제로 인해 북중 간 정치적 갈등이 첨예해지더라도 가급적이면 사회문화교류를 유지 또는 강화하여 양자 간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자국에 필요한 외부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북한의 대중교류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자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공외교적 성격이 짙어졌다. 공공외교는 일반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관계를 넘어 타국의 국민들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⁹²⁾ 북한의 대중국 사회문화교류에서 이러한 공공외교적 성격을 띤 내용들이 많이 포착된다. 단적인 예로 예술대표단 교류를 들 수 있다. 2009년 이후 북한은 중국사회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북한 가극 「꽃파는 처녀」 외에 「홍루몽」, 「량주(梁祝)」 등 중국의 고전 명작들을 북한식으로 각색하여 중국에서 수개월씩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이는 북중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의 일부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단지 그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중국 원작의 친숙함 때문에 중국 관중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동시에 북한의 예술적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특히 북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공연들

⁹²⁾ Department of State a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ic Goal 11: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Y 2004 Joint Performance Summary),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59181.pdf>>. (검색일: 2016.7.21.).

은 중국 관중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 즉 전통사회주의 시대를 살아온 중국 관중들에게 있어 북한 공연은 시대에 대한 향수(鄉愁)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효과는 배가된다.

언론단체 간 교류도 이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 특성상 양국 관계에서 언론기관은 국가 정책방침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국 집권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인민일보」 등 언론사 간 교류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상대국 방문 시 국가 최고지도자가 접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영역이었다. 2013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기타 교류가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언론단체 상호교류는 중단 없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제3차,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 내 대북여론이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언론단체 교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를 위한 학습효과이다. 북한의 대중국 사회문화교류는 매우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대학 및 과학기술 부문 교류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북한과학원 잔디연구분원의 중국과학원에서의 단기연수, 북한 과학원과 중국과학원 간의 신생에너지 관련 학술교류, 중국 농업과학원과 북한 농업과학기술자들 간의 벼 재배, 벼섯 양식 등 실용농업기술 교류 등, 교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북한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항목들이다. 또 다른 예로, 북한 신문기자단들이 중국을 방문할 시 ‘중국문화체제 개혁 현황(2012)’, ‘중국의 경공업 발전 및 신농촌건설 현황(201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2014, 2015)’과 같은 주제에 상응한 중국의 부처 및 기관을 취재하였

I
II
III
IV
V

다. 이 또한 북한이 최근 제시한 ‘문명강국 건설’, ‘경공업발전’, ‘포전담 당제’, ‘경제개발구’ 등 국가 정책 변화와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 즉 북한이 새로운 개혁조치를 구상하면서 중국의 경험과 지식들을 학습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영리적 목적이다. 예술단체 파견과 미술전시회가 대표적이다. 2008년 「꽃파는 처녀」와 2009년 이래 중국 문화부의 인준하에 중국에서 공연된 북한 예술단체 공연의 대부분은 중국 내 공연기획사들이 관여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서예·미술작품 전시회도 중국의 관련 기획사의 주관하에 순회전시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북한의 예술작품들을 중국에 홍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 미술 시장을 겨냥한 경매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심지어 상하이, 단둥 등 지역에 전시관을 세우고, 북한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중국사회를 배경으로 한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중국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05년 이후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북중 협력 원칙을 제시한 이래 사회문화교류의 성격 역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 북중 사회문화교류는 국가 대 국가의 차원보다는 지방정부나 기업들과의 협력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용주의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역 지방정부들의 경우,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북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제재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경험관계를 추진해왔던 동북지역 지방정부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율적 권한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2012년부터 개최하는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나, 2015년 약 3만 ㎡의 면적에 달하고 북한 예술품 1만여 점을 소장한 북중문화전시관 개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도 단지 국가 대 국가의 형식보다는 중국 내 지방정부 내지는 민간 부문들과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감으로써 기회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I

II

III

IV

V

IV. 경제관계



이 장은 북중무역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아니라 본 보고서의 일부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단계 구분 역시 크게 한중수교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한중수교 이후의 시기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단계 구분이 북중무역의 전개과정을 제대로 포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중국세관이 제공하는 2015년까지의 월별 북중무역 데이터를 토대로 각 단계별 북중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계량적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 단계구분이 현실의 북중무역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나타났다.⁹³⁾

이 장에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주로 북중무역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북중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변수들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이 이들 국가와 맺게 되는 국제적 관계의 변화 역시 검토하였다. 현실의 북중무역은 바로 이러한 여러 변수들의 종합적인 반영물로서 변화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현재의 북중무역은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존의 남북교역을 모두 차단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이후 북중무역은 그간의 남북교역이 수행했던 역할을 모두 떠안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는 뜻이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집체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25년간의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 추세를 분석한다. 우선 한중수교 이후 각 단계별로 북중무역이 보이는 추세와 패턴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 추세와 패턴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⁹³⁾ 이 글의 지면상 이러한 계량적 검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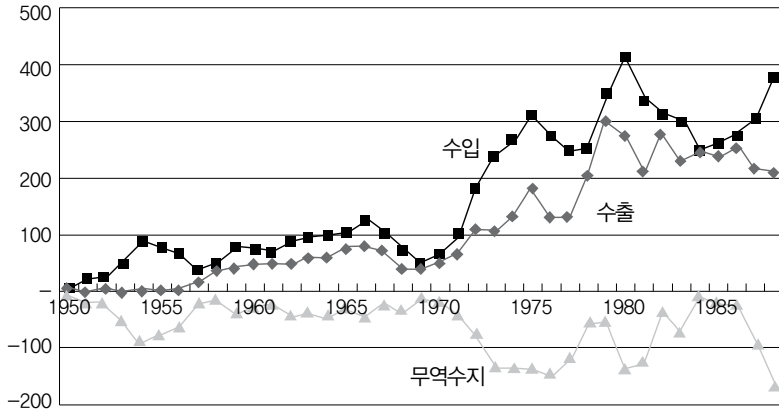
국제관계적인 설명 요인들을 하나씩 분해하여 검토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다양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당 단계의 북중무역의 성격과 특징을 평가할 것이다.

1. 한중수교 이전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하나의 준거점(reference)이 필요하다. 1990년대의 북중경제관계가 이러한 준거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1990년대 이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를 역사적으로 아주 간단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물론 1990년대 이전의 북중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총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몇 주요 연구들은 1990년대 이전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 데이터를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집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1990년대 이전의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 추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개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림 IV-1A ▶ 북한의 대중무역 추이, 1950~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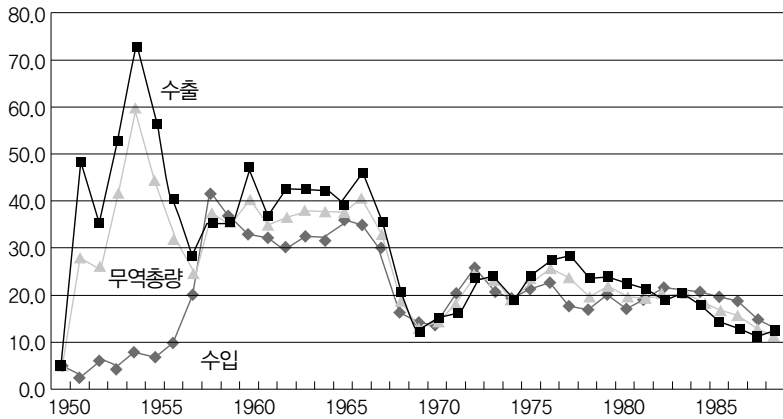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출처: Soo 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 재구성.

그림 IV-1B ▶ 북한무역에서의 중국 비중, 1950~1988

(단위: %)



출처: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 재구성.

- I
- II
- III
- IV
- V

예를 들어, <그림 IV-1>은 최수영이 집적한 1990년대 이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관계를 무역량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의 점유율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북중무역 추세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북중 간 무역규모는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장기적으로 점차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50년대 초반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북중 간 교역규모가 1980년대에 이르면 연간 5~6억 달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북한의 대외교역 점유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추세는 전혀 달라진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북중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60%에 육박했지만, 이 수치는 1980년대 후반에는 10% 내외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1960년대까지 이러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했지만 연간 변동폭이 매우 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연간 거의 변동이 없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북중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안정적으로 변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중 간 교역규모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왜 그 비중은 이처럼 다른 추세를 보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 중의 하나는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북중 간 교역의 기본적인 성격 또는 내용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선 북중무역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비록 한국전쟁 이전에도 북중무역이 존재하

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특징들이 표면화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 이후라는 뜻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전후복구 및 앞으로 재발할 지도 모를 새로운 전쟁의 수행 준비를 위해 대규모의 해외물자 투입을 요구하는 국가였고, 중국은 이러한 북한을 지원하는 주요 사회주의 원조 공여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1950년대 북중무역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에서 (상환의 책임이 없는) 중국의 대규모 원조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무역의 출발 자체가 상업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상업적인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을지 모르지만, 이의 연간 변동폭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원조물자 공여라는 것 자체가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 일반적인 경제적 거래처럼 자체적인 안정성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북한이 일정한 공업화시기에 진입하면서 크게 달라진다. 북한이 내부적인 생산 확대를 토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이러한 수출증대를 바탕으로 다시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사회주의적) 상업거래가 북중무역의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업적 거래를 바탕으로 1960년대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적 거래는 1970년대 들어 북한의 여타 국가와의 대외거래가 요동을 치면서 크게 변화한다. 당시 불거진 중소분쟁을 계기로 북한이 이른바 주체의 경제를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 중심이 기존의 중국과 소비에트 등 사회주의권에서 서방세계로 급격히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I
II
III
IV
V

1970년대에는 20%대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10%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북중무역의 비중 축소에 대응하여 북한은 일본과 같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개발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중무역은 비록 그 규모는 늘었지만 이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980년대 중후반 북중무역이 전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의 수준으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1980년대까지 북한에 있어 북중무역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이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대외교역 거의 전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적어도 198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 불안정기(1992~1999년): 정치외교환경의 영향과 북중 교역의 변화

한국과 중국이 수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부침을 지속해왔다. 물론 이러한 부침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내부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소들과 함께 이들 사이의 전반적 국가관계라는 이중의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이러한 당사국 요인들은 물론 이들이 다른 국가와 형성하는 여타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서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추세

북중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다. 우선 1990년대 초반 북중 간 무역 규모는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대한다. 실제로 1980년대 연간 5~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북중교역 규모가 1993년에는 최대 9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이보다 더욱 크게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하였듯이 1980년대 북중교역이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이 수치는 1990년대 초반 최대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 북중교역은 규모와 점유율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또다시 반전된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중무역의 규모와 점유율이 다시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93년 최대 9억 달러에 육박했던 북중 교역량은 1999년에는 4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점유율 수치는 1990년대 초반의 최대 40%를 상회하는 것에서 1990년대 말에는 20%를 밑도는 것으로 거의 절반 이상 하락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표 IV-1 북중무역 추이, 1992~2000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무역총액			북중 무역액			북중 무역 비중(%)		
	수출	수입	전체	수출	수입	전체	수출	수입	전체
1992	761,153	1,026,248	1,787,401	155,456	541,065	696,521	20.4	52.7	39.0
1993	879,138	1,235,721	2,114,859	297,283	602,298	899,581	33.8	48.7	42.5
1994	1,120,683	1,041,790	2,162,473	199,206	424,459	623,665	17.8	40.7	28.8
1995	921,414	1,250,790	2,172,205	63,596	485,998	549,594	6.9	38.9	25.3
1996	912,992	1,252,688	2,165,680	68,631	496,981	565,612	7.5	39.7	26.1
1997	1,312,519	1,315,763	2,628,282	121,605	534,646	656,251	9.3	40.6	25.0
1998	979,392	1,077,221	2,056,613	57,304	355,676	412,980	5.9	33.0	20.1
1999	922,369	1,141,216	2,063,585	41,704	328,669	370,373	4.5	28.8	17.9
2000	1,175,221	1,672,983	2,848,204	37,214	450,804	488,018	3.2	26.9	17.1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992-2000년의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1/globalBbsDataList.do?setIdx=249>>. (검색일: 2016.8.8.)

위의 표를 보면 1990년대 북중교역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북중무역 규모와 점유율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이것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후반기에는 이들 모두가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경제가 느끼는 북중무역의 중요성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1990년대 들어 불과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북중무역의 추세가 급격히 반전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이러한 반전이 나타난 것일까?

우선 1990년대 전반기 북중무역의 규모와 점유율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1980년대 말 소비에트의 붕괴로 국제적인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권의 경제거래 자체가 아예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에 ‘우호적인 사회주의권 거래’를 수행해줄 수 있는 거래 상대국은 중국이 유일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크게 확대하는 길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그간 공들였던 서방세계와의 무역 역시 거의 대부분 차단되는 곤궁한 상황에 몰려 있었다. 1970년대 북한당국이 서방세계에서 빌린 외자를 상환하지 못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파산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재일교포의 북한 내부투자 역시 북한당국의 간섭 증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초반 북한당국이 당시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회주의 우호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기까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0~5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지만, 북한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북한이 해외로부터 필요한 물자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러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을 늘리는 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의 경우에도 북한의 수출은 여전히 상업적으로 더 많은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0년대 전반기 북중무역의 경우 북한이 일본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경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원조의 형태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당시의 북중무역이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비상업적 거래였거나, 아니면 일본과 같

I
II
III
IV
V

은 여타 국가와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면적인 복합거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보였던 북중무역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왜 갑자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을까? 당시 중국의 혜택으로 제공되던 비상업적 거래가 어떤 이유에서건 더이상 불가능해졌던 것일까, 아니면 일본과 같은 여타 국가와 북한의 거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일까?

나. 요인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일본이 아닌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세 국가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1992년을 기점으로 전격적인 수교관계에 돌입한다. 그리고 응당 이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북중 간의 정치적 악영향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중수교 이후 북한이 대만과 접촉하여 일정한 경제적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추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북한은 국제 사회 주의권의 몰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만의 상업적 핵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응당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왔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 측의 반발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에서 199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북 식량수출이 사실상 중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 IV-2 ▶ 북한의 국가별 곡물수입 내역, 1990~1996 (USDA 추정치)
(단위: Metric T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쌀							
(중국)			16	12,503	28,549	2,396	34,000
(홍콩)		800					
(한국)		5,000				150,000	
(태국)		51,594	10,000	100,000		177,000	75,000
(베트남)		103,606					67,000
(기타)							38,950
옥수수							
(유고)							
(중국)	264,609	216,790	586,577	876,218	209,478	9,000	139,474
(태국)							
(미국)						85,500	
보리							
(호주)							
(중국)			200	276	100	976	
(홍콩)		515					
(시리아)						20,000	
밀							
(호주)	188,201	203,963	63,000			83,000	
(캐나다)		454,988		293,315			
(중국)		1,230	60,314	37,374	8,966		239,655
(홍콩)		198	102	147	69		
(인도)		145,668					14,000
(터키)			180,235				
(EU)	71,781					33,000	
(러시아)							
(유고)		75,012					
(기타)					100,000		120,000
총계	524,640	1,259,893	923,650	1,349,610	401,299	893,707	968,723

출처: Woon Keun Kim, Hyunok Lee, and Daniel A.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1998), p. 531.

I
II
III
IV
V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초반의 북중무역은 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러한 수입물품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중국산 옥수수를 위시한 식량수입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매년 최대 80만 MT(Metric Ton)가 넘는 옥수수를 북한에 수출하였고, 이는 북한의 식량배급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1994년 들어 갑자기 동북지방의 옥수수 흉작을 명분으로 이러한 대북 옥수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 옥수수 수출은 1993년의 최대 89만 MT에서 1994년에는 21만 MT, 그리고 1995년에는 불과 9천 MT로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옥수수 수출 중단이 1994년과 1995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북한의 기근과 경제위기의 촉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표 IV-3〉은 북한당국이 발표한 1990년대 북한의 공식 GDP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1993년 209억 달러에서 1994년 갑자기 154억 달러로 거의 20% 이상 하락하며, 1995년에는 128억 달러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105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사실상 1993년의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세가 가장 큰 부문이 바로 농업부문이었다. 실제로 농업부문의 GDP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1990년대 중후반에는 거의 1/3 수준으로 급락한다. 앞서 언급한 1994년 이후 중국의 대북 옥수수 수출 중단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이는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기근을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전반적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표 IV-3 > 북한의 국내총생산 추이, 1992~2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9	2000
GDP (공식통계, 億 달러)	208.8	209.4	154.2	128.0	105.9	102.7*	105.9*
1인당 GDP (공식통계, 달러)	-	991	-	-	-	453	463

주: 1999, 2000년은 GDP가 아니라 GNP 통계임.

출처: UNDP,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ew York: United Nations, 1998), pp. 28~29; U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HRI),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Symbol: HRI/CORE/1/Add.108/Rev.1, July 16, 2002), <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HRI%2fCORE%2f1%2fAdd.108%Rev.1&Lang=en>. (검색일: 2016.8.7.).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왜 북중무역이 갑작스럽게 부진에 빠졌는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간다. 1990년대 초반 국제적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여전히 우호적인 무역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거래를 늘림으로써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로 이것이 1990년대 초반 북중무역의 확대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북중무역은 중국에게 상업적으로 매우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유리한 성격의 거래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여 비상업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거래였을 가능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상당한 냉각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북한은 대만과의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았다. 1994년 중국의 갑작스러운 대북 옥수수 수출 제한 및 중단 조치는 바로 이러한

I
II
III
IV
V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가 전면화된 것이다.

다. 특징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진 북중무역의 정체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0년대 중후반의 대규모 기근과 경제위기로 북한경제의 체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의 대외교역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시까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근과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배경의 하나로 중국의 갑작스러운 대북 옥수수 수출 중단과 이를 둘러싼 북중 간의 정치적 불편함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측으로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보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동일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든 이러한 정치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북중교역을 크게 확대할 유인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후반 북중교역이 갑자기 부진에 빠진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북중교역의 부진을 몰고 온 여러 요인들의 연쇄적 연결고리의 맨 앞부분에 바로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중수교라는 요인이 1990년대 후반기 북중교역에 어느 정도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설명요인으로 1990년대의 북중교역을 토론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흥미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3. 안정화기(2000~2009년): 3각 정립무역에서 북한지지 교역구조로

1990년대의 북중무역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전반기에는 국제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배경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국가 사이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기에는 두 국가의 정치적 긴장과 북한의 경제위기로 인해 오히려 교역이 부진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국가의 정치적 긴장과 북한의 경제위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라는 전혀 의외의 변수가 하나의 설명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북중 간 경제관계는 이러한 1990년대의 요소들 모두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어 나타나게 된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의 경제위기 역시 일정 부분 진정됨에 따라 북중교역이 질과 양의 측면 모두에서 비약적인 증대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북중교역 증대의 이면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접근과 남북경협을 전략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의외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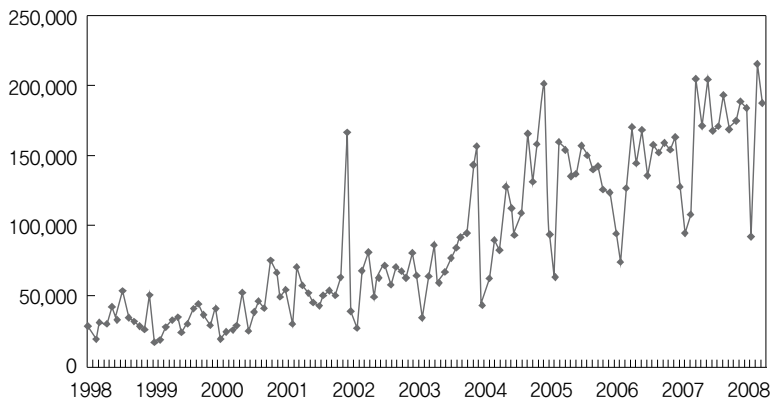
〈그림 IV-2〉는 1998년 이후 2009년까지 북한과 중국의 총 거래 규모를 중국세관이 제공하는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⁹⁴⁾

⁹⁴⁾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1990년대의 북중무역과 2000년대의 북중무역을 분석하는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일이다. 2000년대의 경우 중국세관이 발표하는 북중무역에 대한 매우 세세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다 상세하고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이에 따르면 북중무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추세가 관찰된다. 첫째, 전반적인 추세가 2000년 상반기 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견조(堅調)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1998~2000년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일정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월별)북중무역 규모가 2000년 또는 2001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는 뜻이다. 둘째, 이러한 증가세는 특히 2004년 또는 2005년을 기점으로 더욱 뚜렷해져 이후 2009년 현재까지 그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2000년대 들어 북중무역 규모는 1990년대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벗어나 뚜렷한 우상향의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IV-2 북중거래 규모 추이, 1998~2008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표 IV-4 ▶ 북중무역 월별 계절성 지수의 분산 추이, 1998~2010

	무역총액	수입	수출
1998	0.084	0.101	0.078
1999	0.081	0.088	0.058
2000	0.191	0.213	0.085
2001	0.314	0.091	2.420
2002	0.068	0.081	0.143
2003	0.160	0.059	0.540
2004	0.154	0.239	0.351
2005	0.045	0.044	0.062
2006	0.043	0.054	0.035
2007	0.047	0.076	0.011
2008	0.153	0.271	0.117
2009	0.089	0.140	0.045
2010	0.098	0.067	0.185
평균	0.117	0.117	0.318

출처: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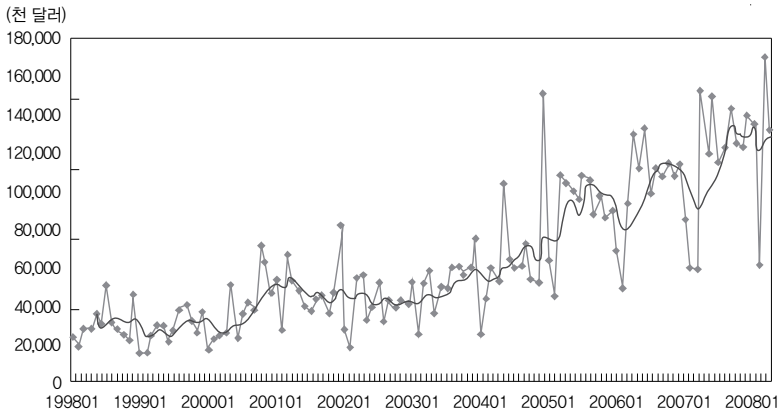
그런데 <표 IV-4>에 따르면 앞서와 같은 북중무역 규모의 절대적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의 월별 거래 편차 또는 변동폭 역시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석(2013)이 계산한 각 연도 북중무역의 월별 계절성 지수의 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북중무역 규모가 각 해당 월에 따라 얼마나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분산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도는 그렇지 않은 연도에 비해 월별 무역 규모가 더욱 커다란 변동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앞서의 무역 규모와 비슷하게 두 가지의 특징적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1998~2000년까지의 월별 북중무역 규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으나, 그 규모가 점프하기 시작하는 2000년부터는

I
II
III
IV
V

월별 북중무역의 변동폭이 매우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 0.08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북중무역의 월별 계절성 지수의 분산값은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2001년의 경우에는 0.3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 이전에는 월별 북중무역 규모가 평균값에서 약 8% 정도만이 변화했는데 반해, 2001년의 경우에는 평균값에서 무려 30% 이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런데 이러한 월별 북중무역의 변동폭은 2004년을 기점으로 2000년대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09년과 2010년 북중무역의 월별 계절성 지수 분산값은 다시 0.08 정도로 2000년 이전의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중무역의 월별 변동폭이 2000년대 하반기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어 매우 안정적인 교역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2000년대 북중무역은 1990년대와는 달리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오히려 2000년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전반기에는 월별 북중무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극심한 변동을 보여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성 역시 2004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북중무역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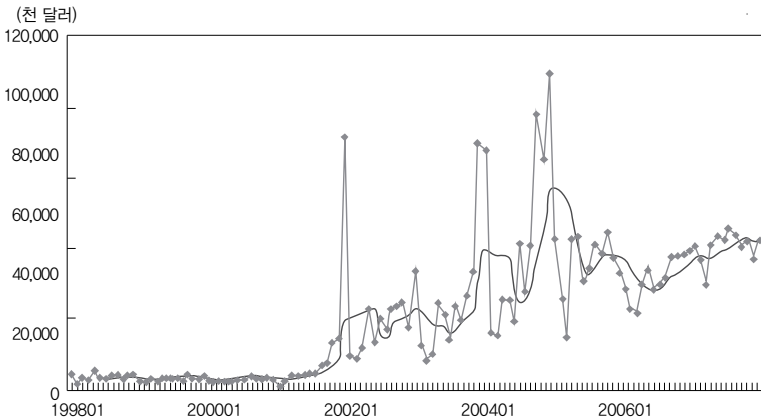
그림 IV-3 ▶ 북한의 대중국 수입 월별 추이, 1998~2008



주: 실제 월별 수입액과 동 수입액의 6개월 이동평균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IV-4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월별 추이, 1998~2008



주: 실제 월별 수출액과 동 수출액의 6개월 이동평균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I
II
III
IV
V

한편, <그림 IV-3>과 <그림 IV-4>는 이러한 추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를 북한의 수입과 수출로 분해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림 IV-3>은 1998년 이후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입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은 앞서 살펴본 총 거래 규모의 변동과는 그 뉘앙스가 매우 다르다. 우선 북한의 수입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총 거래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2000년 또는 2001년이라기보다는, 이보다 훨씬 늦은 2004년 하반기 또는 2005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998~2000년까지 북한의 수입은 일정한 박스권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북한의 수입은 1998~2000년에 비해 그 규모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추세는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새로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추세의 본격적 전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전반적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며, 이후 2008년 현재까지 북한의 수입은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4>에 나타난 월별 수입의 변동폭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월별 수입 변동폭은 앞서의 총 거래 규모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도 특별히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2000년 이전 0.1 수준을 보였던 북중무역의 월별 계절성 지수의 분산 값은 2000년대 들어서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 관한 한 2000년대 들어서도 월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대중 수입 추세는 앞서의 총 거래 규모 추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수입이 뚜렷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도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후반의 일이고, 이에 따른 월별 거래의 불안정성 역시 크게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수출은 이러한 수입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북중 간 총 거래 규모의 추세는 수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북한의 대중 수출 추세에 의해 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림 IV-4>에서 보듯이 북한의 수출은 2000년 하반기부터 매우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2009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표 IV-4>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월별 수출 변동폭 역시 앞서의 총 거래 규모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00년 이전 0.06에서 0.08 수준을 보였던 북중무역의 월별 계절성 지수 분산값은 2001년에는 2.42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도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0.05에서 0.1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초반에는 월별 변동폭이 극심한 수준으로 확대되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는 다시 줄어들어 어느 정도 거래의 안정성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중거래 총액과 이를 구성하는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그 추세와 변화의 패턴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의 특징을 모두 결합한다면, 2000년대 북중무역의 특징을 과연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0년대 말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북중거래 총액 역시 커다란 변화 없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변화시킨 계기는 바로 2000년 하반기 또는 20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의 대중 수출 드라이브였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대중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전체 북중거래 규모에서 역시 분명한 증가 추세가

I
II
III
IV
V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월별 수출 규모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불안정성이 노정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전체 북중거래에도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전반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1~2004년까지의 전체 북중거래는 이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거래의 월별 변동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 역시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2000년대 하반기, 보다 정확하게는 2004년 하반기 또는 2005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수출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월별 변동폭 역시 줄어드는 등 일종의 '상승세 속에서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는 흥미롭게도 북한의 대중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거래 규모 또한, 수출의 상승 추세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이 기간 중 북한의 수입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로 월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전체의 북중거래가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요컨대, 2000년대 전반기 북중무역은 북한의 수출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로 전환된 동시에, 월별 거래의 진폭 또한 계속 확대되는 등 불안정성 역시 함께 증폭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기에는 이와는 달리 전체 북중무역이 주로 북한의 수입 증대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결과 기존의 수출 증대 추세와 맞물려 전체 교역 규모가 2000년대 전반기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가 월별 변동폭이 작아지는 등, 거래의 안정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보면 북중무역 자체로서는 2000년대 후반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 들어 북중무역은 왜 이러한 추세와 패턴을 보였을까?

나. 요인과 특징 1: 북중관계의 회복과 한·중·일 3각 정립무역

먼저 2000년대 전반기를 생각해보자. 이 기간 동안 북중무역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러한 수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별 교역량의 변화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북중무역의 증대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북한과 중국 모두에서 북중무역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표 IV-5 ▶ 북한의 GDP와 성장률 추이, 2000~2010

(단위: 백만 달러, %)

	북한 공식통계		UN추정 북한 GDP	한은추정 북한 성장률
	GDP	성장률		
1990	-	-	14,702	-
1991	-	-	13,687	-4.4%
1992	20,875	-	12,458	-7.1%
1993	20,935	0.3%	10,744	-4.5%
1994	15,421	-26.3%	8,307	-2.1%
1995	12,802	-17.0%	4,849	-4.4%
1996	10,588	-17.3%	10,588	-3.4%
1997	-	-2.2%	10,323	-6.5%
1998	10,273	0.5%	10,273	-0.9%
1999	-	0.1%	10,280	6.1%
2000	10,608	3.2%	10,608	0.4%

I
II
III
IV
V

	북한 공식통계		UN추정 북한 GDP	한은추정 북한 성장률
	GDP	성장률		
2001		3.9%	11,022	3.8%
2002		3.2%	10,910	1.2%
2003		7.7%	11,051	1.8%
2004		4.0%	11,168	2.1%
2005			13,031	3.8%
2006			13,764	-1.0%
2007			14,375	-1.2%
2008			13,337	3.1%
2009			12,035	-0.9%
2010			13,945	-0.5%

- 출처: 1. 북한의 공식통계는 다음 참조. 이석, 『북한의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pp. 44~45.
 2. UN 추정통계는 UN 통계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국민계정 추정 웹사이트에서 참조, <<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검색일: 2016.8.8.).
 3. 한은 추정치는 한국은행 참조,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ld=2237>>. (검색일: 2016.8.8.).

무엇보다 북한의 경우에는 <표 IV-5>에서 보듯이 1990년대 기근을 동반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북한당국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1998년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 개선과 기업법의 정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시도는 2000년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2002년의 7·1 조치에 이르기까지 비록 점진적이지만 매우 확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물자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간의 경제위기 자체가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석유와 식량 등 해외물자의 유입 실패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했음은 물론, 경제위기 동안 국내의 모든 자원이 사실상 고갈되거나 피폐화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물자의 유입은 응당 대외무역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대외무역은 다시 인접한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정치적으로도 북중무역의 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실제로 당시 북한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정치적 화해를 모색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1998년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2년 첫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일본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이른바 ‘납치자’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서방세계의 일원들이다. 따라서 아무런 다른 준비 없이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모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으로서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또는 이에 필요한 북중무역의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북중무역의 확대가 필요했던 것은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중국은 2000년을 전후하여 매우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한다. 이 기간 중 연간 10%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외무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확대는 북한과 같이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국가와의 우선적인 교역 확대를 제외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북중무역의 확대에 필요한 충분한 정치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일 북한이 중국과의 사전적인 관계개선 없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 밀착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I

II

III

IV

V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으로서는 가능한 조기에 북중무역을 확대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기근 및 경제위기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였으며, 이들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북한, 미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서 다양한 외교적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탈북자의 인권에 신경을 쓰지 않는 비인도주의적인 국가로 비추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당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북중무역 확대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을 전후한 북중 간의 탈북자 문제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중무역의 확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북중무역의 확대는 북한과 중국 모두 공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였다. 첫째는 북한으로서는 북중무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이에 소요되는 달러(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이 과거와 같이 북한에 대대적인 사회주의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점차 시장경제로 전환되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현실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북중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대중국 수출을 늘려 경화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둘째,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경제수준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주력 품목들이 송이버섯과 수산물 같은 자연채취물이나 무연탄 및 철광석 같은 광물제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자연채취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아직은 이를 수출하는

국가인 동시에, 북중무역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이 무연탄과 같은 광물자원의 주요 생산지라는 점에서 이들 북한산 광물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0년대 초반의 대외무역, 특히 수출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전략을 채택한다. 그것은 북한산 자연채취물이나 광물제품 같은 주력 수출상품은 이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 선진국에 우선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대신 중국에는 이러한 특정 상품들에 구애받지 않고 이른바 ‘팔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수출한다’는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표 IV-6 >> 중국의 국가별 대외무역 추이, 2000~2010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708	1,338	1,467	1,683	2,062	1,997	2,557
중국	37	499	468	582	754	793	1,188
대한민국	152	340	520	765	932	934	1,044
일본	257	131	78	0	0	0	0
수입	1,686	2,718	2,879	3,055	3,574	3,095	3,528
중국	451	1,081	1,232	1,392	2,033	1,888	2,278
대한민국	273	715	830	1,033	888	744	868
일본	207	63	44	9	8	3	0
합계	2,394	4,056	4,346	4,738	5,636	5,092	6,085
중국	488	1,580	1,700	1,974	2,787	2,681	3,466
대한민국	425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일본	464	194	122	9	8	3	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0~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연구보고서, 2000~2010); 통일부(<http://www.unikorea.go.kr>)의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참조. (검색일: 2016.8.9).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따라 2000년대 초반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출현한다. 우선 <표 IV-6>에 제시되어 있듯이 북한의 수출 대상

I
II
III
IV
V

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거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3자 정립'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2년의 경우 북한은 대외적으로 총 10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 중 한국과 일본,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각각 2.5억 달러 내외로 엇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과 대중국 수출은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출하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때그때 수출 가능한 모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의 수는 2000년대 이전 HS 6단위 기준 약 400개의 수준에서 2001~2005년 사이에는 무려 848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수출 패턴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월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게 된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중국에 수출 가능한 제품들의 수와 규모가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다, 특히 특정기간 동안 이러한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밀어내기 수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북중무역은 북한의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그 규모가 시기 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불안정성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초반 또는 전반기의 북중무역은 조금 특이한 위치에 있었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출을 통한 경화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공히 북한의 주요 수출지로 3자 정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북한의 수출 대상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특정의 북한산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요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그때그때 판매 가능한 모든 제품이 수출되는 현상

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북중무역 역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발 빠른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불안정성 역시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다. 요인과 특징 2: 남북 및 북중교역과 북한지시 교역구조

위와 같은 북중무역 추세와 패턴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닌 일본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이른바 북한당국의 일본인 납치와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북일교역을 전면 차단하는 대북제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대외교역 환경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이제 북한의 실질적 교역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로만 좁혀지게 되었다. 둘째, 이중 북한이 실제로 높은 수준의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는 한국뿐이어서 북한의 대한국 교역과 대중국 교역 사이에 새로운 역할분담이 요구되었다.

표 IV-7 일본 대북제재의 무역효과 분해 결과

(단위: 천 달러)

	2004	2005	2006	2004~2006 전체	2004~2006 평균
북일무역 감소	110,402	115,782	84,898	311,082	103,694
여타 국가들의 대북무역 증가	82,339	95,781	77,902	256,022	85,341
(그중 한국)	69,494	80,876	65,473	215,843	71,948
순 무역효과	28,063	20,001	6,996	55,060	18,353

출처: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2010), p. 138.

I
II
III
IV
V

이와 관련 <표 IV-7>은 앞의 두 가지 변화 가운데 두 번째 변화의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북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일본 수출에서 연 평균 1억 달러 내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수출 피해를 다른 국가로의 수출 증대를 통해 만회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 증대 효과가 연 평균 8천 5백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를 거의 상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여타 국가와의 수출 증대 가운데 거의 90%에 육박하는 7천 1백만 달러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일 수출 피해를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통해 만회하였다는 뜻이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에 있어 한국은 체계적으로 높은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이러한 경화의 획득과 더불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더욱 빠르게 확대해야 할 새로운 필요에 직면하고 있었다. 앞서의 <표 IV-5>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거듭해 일단 그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후 보다 가시적인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해외물자의 수입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두 개의 교역 상대국,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을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북한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를 편의상 ‘북한지지 교역구조(DPRK Supporting Trade Structure)’라고 부를 것인데,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즉 북한은 경제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는 중국을 통해 수입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북한은 언제나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충당하

기 위한 경화를 바로 한국으로부터 획득하는 교역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경제에 더욱 필요해진 해외의 물자 수입을 북중교역을 통해 달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화는 주로 한국과의 무역, 즉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방식이다.

표 IV-8 ▶ 북한의 대중무역적자 및 남북교역에서의 경화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중 무역적자	상품적자	414	406	197	232	214	582	765	811
	실질 교역 흑자	61	111	197	169	168	221	326	500
남북교역 에서의 경화 수입	금강산 입산료	0	37	22	13	15	14	12	20.3
	개성공단 임금	0	0	0	0	0	3	7	13.9
	계	60	147	218	180	180	233	341	534.2

주: 1.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무상지원 논란이 있는 대북 원유수출을 제외한 북중무역에 있어서의 수출·입 차를 의미함.

2. 한국으로부터의 경화유입에는 금강산 입산료 이외의 제지급금, 북한 방문자 서비스 수입료, 탈북자 및 한국인들의 대북송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출처: 이석,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 정책포럼』, 제212호 (2009), p. 5, <표 3>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 및 남북교역에서의 경화 수입 추이.

실제로 <표 IV-8>은 2000년대 중후반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경화의 규모와 북중교역에서 기록하는 무역적자의 규모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양 변수의 규모가 더욱 밀접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약 5억 달러의 경화 수입을 올렸는데, 같은 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의 규모 역시 무상 지원 논란이 있는 석유 수입 부분을 제외하면 약 5억 달러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들 변수들의 규모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의 상관

I
II
III
IV
V

성이 존재한다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북한지지 교역구조’라고 부르는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상호 구조화 현상은 단순히 앞서와 같은 상업적 무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대북지원 및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활용 등에 이르는 더욱 복잡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을 통해서는 쌀과 비료를 대규모로 지원 받았으며, 중국을 통해서는 석유를 지원받고 있다는 믿음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기초물자를 북한당국이 원조의 형태로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교묘하게 분산하여 획득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0년대 후반 불거진 소위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 사건은 북한이 운용하는 경화의 유통에서조차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에서 획득한 경화를 운용하는데 있어, 이미 파산상태를 선고받은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편리한 중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북한지지 교역구조’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바로 이러한 교역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북중무역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2000년대 후반기 북중무역은 북한의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위주로 종래보다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확대의 과정에서도 교역의 월별 편차 또는 불안정성이 2000년대 초반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북한지지 교역구조’를 감안하면 매우 당연하다. 2000년대 중후반 북한은 한국을 매개로 하는 체계적인 경화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경화를 토대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유지에 필요한 해외물자를 더욱 크고 안정적으로 수입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데이터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지 지 교역구조’가 실제로 기능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2000년대 중후반의 안정적인 북한의 대중국 수입 확대와 이를 통한 교역 규모 증대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될 수 있다.

4. 전일화기(2010년~현재): 남북교역의 중단과 북중교역의 전일화

앞에서 우리는 2000년대 북중무역의 배경에는 ‘북한지 지 교역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의 독특한 무역전략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구조는 북중무역을 북한의 또 다른 유일 교역 대상국인 한국과의 남북교역에 밀접히 접합시킨 교역전략임도 토론하였다. 그러나 ‘북한지 지 교역구조’는 2010년 한국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계기로 완전히 와해된다. 구조를 지탱하는 남북교역 자체가 이후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중교역은 2010년 이후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가. 추세

우선 <표 IV-9>를 보면, 2010년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북중무역에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2010년에서 2013년에 이르는 기간에 북중무역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급증하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었다. 실제로 2010년 12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I

II

III

IV

V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3년 29억 달러로 증대하였다. 불과 3~4년의 짧은 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세 배 가까이 증대하였고, 그 결과 이 기간 중 북중무역 총액 역시 34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대하였다.

표 IV-9 ▶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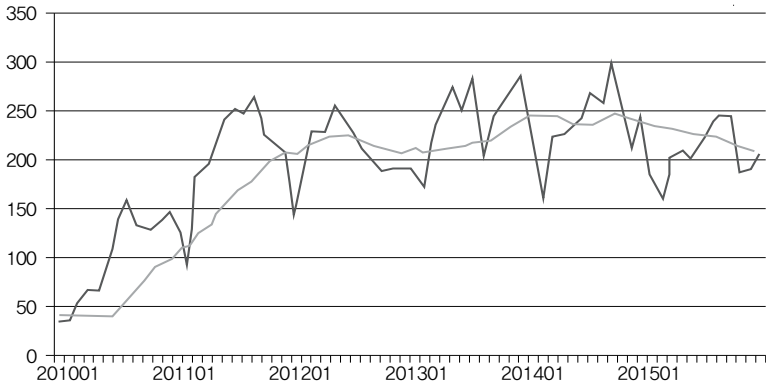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무역총액
2010	1188	2278	3466
2011	2464	3165	5629
2012	2485	3446	5931
2013	2912	3633	6545
2014	2841	3523	6364
2015	2484	2946	5430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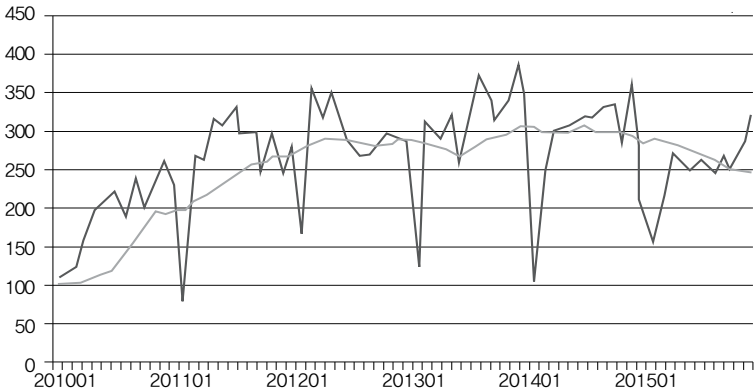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급증 추세는 2013년 이후에는 갑자기 정체 또는 하락 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3년까지 북중무역 급등세를 이끌었던 북한의 대중 수출은 이후 2014년까지 오히려 25억 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중무역 총액은 더욱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6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북중무역 총액이 2015년에는 54억 달러로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5A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월별 추이, 2010.1~2015.12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IV-5B ▶ 북한의 대중국 수입 월별 추이, 2010.1~2015.12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IV-5A〉와 〈그림 IV-5B〉는 이러한 추세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월별 수출액은 2010년 7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2년 1월까지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급등 추세는 2012년 1월부

- I
- II
- III
- IV
- V

터 2013년 12월까지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진정된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북한의 대중국 월별 수출은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증가폭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난다.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 자체가 비록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된다.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정체 내지 점진적 하락세로 반전되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역시 수출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추세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지는 빠르게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장기적인 정체 또는 미약하지만 점진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은 왜 이처럼 또 다른 반전을 경험한 것일까?

나. 요인: 남북교역의 중단과 북중무역에의 파급 효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그것은 바로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중단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실질적 주요 교역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 등 단 두 국가로 좁혀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두 국가와의 교역을 접합하여 이른바 ‘북한지지 교역구조’를 형성해왔음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이러한 ‘북한지지 교역구조’를 붕괴시켰고, 이제 북한의 실질적 교역 상대국은 중국이라는 단 한 국가로 좁혀졌다. 더욱이 문제는 기존의 ‘북한지지 교역구조’에서는 북한이 경화를 획득하는 통로가 남북교역이었으며, 이렇게 획득된 경화를 토

대로 해외의 물자를 수입하는 통로가 바로 북중교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남북교역이 봉쇄되면 북한의 경화 수입 자체가 어려워져 북중교역 역시 축소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표 IV-10 ▶ 북한의 대한국 수출의 대중국 수출로의 대체금액, 2010.7~2012.12

(단위: 천 달러)

	2009년 대비 대남 수출 감소액 (A)	2009년 대비 대중 수출 증가액 (B)	대남 수출의 대중 수출로의 대체 (C)	(C)/(A)	(C)/(B)
월평균	37,831	126,873	13,367	35.33%	10.54%
연평균	453,975	1,522,480	160,404	35.33%	10.54%

주: 대한국 수출의 경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을 통한 수출액만을 포함.

자료: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2010), p. 61.

표 IV-11 ▶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별 기여도, 2010~2012

(단위: 달러, %)

HS 코드	2009년 대중 수출	2010~2012년 대중 수출 (연평균)	5·24 조치 이후 대중 수출 증가액 (연평균)	5·24 조치 이후 대중 수출 증가액의 상품별 기여도
	(A)	(B)	(C) = (B) - (A)	(D)
전체	793,025,950	2,050,655,026	1,257,629,076	100.00%
270111(무연탄)	256,186,105	900,943,691	644,757,586	51.27%
260111(철광석)	93,949,734	249,905,085	155,955,351	12.40%
620193(남성외투)	11,788,088	56,152,190	44,364,102	3.53%
720110(선철)	36,909,477	82,628,137	45,718,660	3.64%
620293(여성외투)	13,173,674	39,163,846	25,990,17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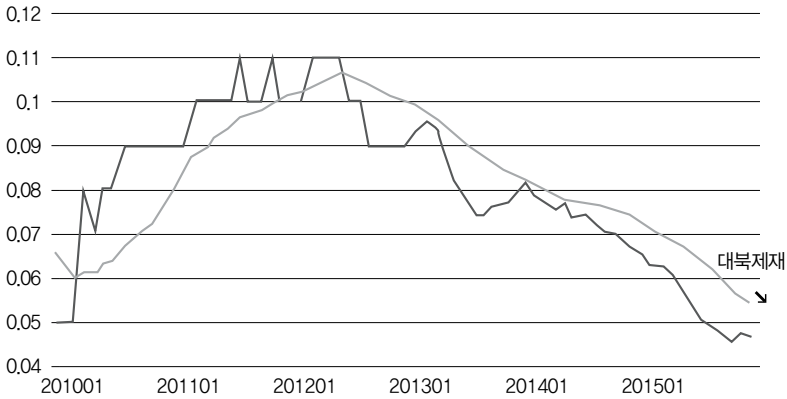
출처: 이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3), p. 41.

2010년 이후 북중교역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대중국 무역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경화의 획득 통로가 중국 이외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대중국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과거 일본의 대북제재에서처럼 기존에 한국으로 수출하던 상품을 중국으로 대체 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발전의 단계와 수준이 달라 북한으로부터 수요하는 제품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IV-10>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이후 2012년 말까지 북한의 대한국 수출은 월 평균 3,783만 달러가 감소하였지만, 이 중에서 중국으로의 대체 수출이 가능했던 부분은 1,337만 달러 정도로 전체의 35%에 불과하였다. 이는 과거 일본의 대북제재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5·24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한국 수출을 그대로 대중국 수출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여 북한당국은 약간은 임시방편적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한 가지 방안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단 두 가지 광물자원을 중국으로 새롭게 대대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기존의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교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실제로 <표 IV-11>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2010~2012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연 평균 13억 달러 정도가 증대하였는데, 이 중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 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1%와 12%로 나타나, 이들을 합치면 전체 수출 증가분의 무려 63%가 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단 두 가지 상품을 통해 한국의 5·24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대중국 수출 확대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IV-6 >>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 추이, 2010.1~2015.12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가 제공하는 중국해관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현실로 실현된 데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 요소가 작용하였다. 하나는 바로 이 기간 중 중국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북한산 무연탄과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였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그림 IV-6>에서 보듯이 2010년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무연탄 및 철광석 시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은 2010년 이후 세 배 이상 증대하였고, 이것이 다시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과 수입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은 사실상 북중무역으로 단일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무역 자체가 무연탄 및 철광석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몇 배 더 성장함으로써 전체 교역 규모가

I
II
III
IV
V

오히려 과거 북중무역 이외의 교역 역시 진행되던 시기보다 더욱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서와 같은 현상은 동일한 이유로 인해 2012~2013년을 기점으로 북중무역 및 이것이 대표하는 북한의 대외교역 전반의 부진과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림 IV-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광물자원의 시세는 2012년 초반을 기점으로 정점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2015년 현재까지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2013년 이후 8%를 기점으로 더욱 하향 안정화됨으로써 이들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예전처럼 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정부는 이러한 무연탄과 철광석을 이용하는 중국 내 동북 3성의 산업단지를 일종의 공해산업으로 간주하여 그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2013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및 철광석 수출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북한의 대중국 수출 전반은 물론 이에 연이은 대중국 수입마저 감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무역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이후에는 2015년 현재까지 뚜렷한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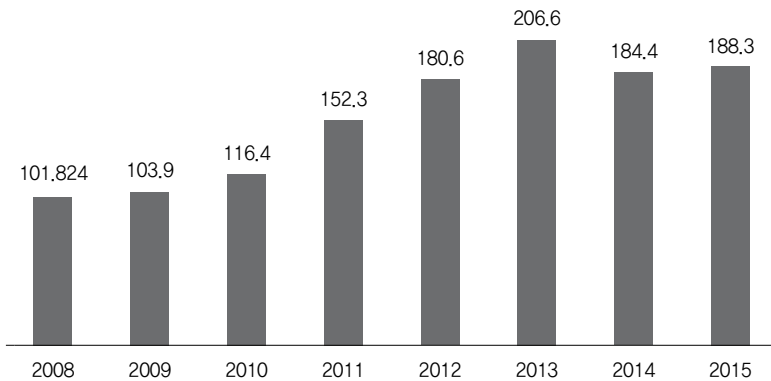
다. 특징: 북한지지 교역구조를 대체하는 전일화된 북중교역

물론 한국의 5·24 조치 및 이에 따른 '북한지지 교역구조'의 붕괴에 대해 북한당국이 단순히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 같은 상품거래 확대로만 대응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IV-7>은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당연히 201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대중국 노동력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으로부터의 경화 확보 노력 역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2010년 이후 중국인의 북한관광 확대를 비롯하여 대외적인 투자와 서비스 거래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응당 이러한 거래는 북중 간의 상품거래의 확대에 필요한 경화의 확보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앞서의 <표 IV-9>와 <그림 IV-5>에 나타난 2010년 이후 북중무역 추세를 단순히 상품거래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중 간 거래는 비상품 거래보다는 상품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의 타당성이 크게 훼손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IV-7 중국 방문 북한인 수 추이, 2008~2015

(단위: 천 명)



출처: 中國國家旅遊局, <<http://www.cnta.gov.cn/>>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5. 평가 및 분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 판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중수교 이후 북중무역은 규모와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점유율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정체하거나 심지어는 뚜렷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중수교에 따른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1994년 중국의 갑작스러운 대북 식량수출 중단 및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위기 확대를 불러와 중국적으로는 북중무역 자체에 대한 경제적 추진력과 동기를 약화시키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 북한과 중국은 모두 북중무역을 (재)발전시킬 강력한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해외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유인에 더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국제관계적 지렛대로서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동기 역시 존재하였다. 중국 역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해외와의 무역확대 요구와 더불어 북한과 동일한 정치적 유인, 그리고 탈북자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북중무역은 그간의 정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2000년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의 북중무역은 이른바 북한이 추구하는 한·중·일 3각 정립무역 체계 안에서 기능하였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우선적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달러 획득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에는 여타의 수출 가능한 모든 제품들을 수출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경로를 통해 획득한 경화를 바탕으로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독특한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한·중·일 3각 정립무역 체계는 2000년대 중반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면서 종식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한국 및 중국과의 무역을 교묘히 접합하고 구조화하여 북한경제의 유지와 발전에 활용하는 이른바 ‘북한지지 교역구조’의 형성에 착수한다. 이러한 교역구조는 북한이 대한민국 무역을 통해 경화의 획득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획득된 경화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를 피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해외의 원조물자와 달러의 유통같은 문제 역시 대한민국 무역과 대중국 무역을 동시에 접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북중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바로 이러한 ‘북한지지 교역구조’ 및 또다른 축을 형성하는 남북교역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후반의 ‘북한지지 교역구조’는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를 계기로 기능이 정지된다. 이는 곧 북한의 입장에서 기존의 해외의 주요 경화 획득 통로가 폐쇄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금은 극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수단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두 가지의 광물자원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2010~2013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북한의 정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들 광물자원의 국제적 시세가 상승하고, 중국의 경기상승에 따른 이들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기간 중 북중무역은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을 배경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3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역전된다. 이들 광물자원의 국제적 시세가 하락하고,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이들 자원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반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북중무역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I
II
III
IV
V

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평가

위에서는 한중수교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북중관계의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발전 추세를 분석하였다. 물론 시기별 구분이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 분야의 고유한 특징과 상호간 파급효과가 즉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외교관계를 냉각시키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정치외교관계는 그 이벤트가 발생한 연도를 바로 시기 구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관계나 경제관계에는 그 이벤트가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이벤트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시기의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 특히 국가(정부)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이나 시장 영역의 경우는 각 분야의 발전 동력이 지속되어, 정치적 요인의 파급효과가 다소 뒤늦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시기 구분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각 분야별, 시기별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정치외교관계는 크게 갈등기, 협력기, 조정기로 구분되었다. 갈등기는 주로 1990년대로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 등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 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시기는 양자 갈등이 우세하였고 정치교류 역시 매우 냉각되었다. 2000년대는 협력기로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북중 간 소통의 필요성 확대로 정치외교교류가 확대되었다. 북한은 핵을 통해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I
II
III
IV
V

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와 북한정권의 안정성 유지 등의 이유로 대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실험으로 인한 북중 정치외교관계의 일시적 경색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의 양국관계는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강한 국가론을 천명한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핵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이해 충돌로 인해 상호 간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냉각된 정치외교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사회문화관계는 정치외교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냉전기 사회주의적 전통의 동질성은 양국 간 사회문화교류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정치적·역사적 전통은 실리를 중시하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이기는 하지만 옛 추억의 향수 때문에 그 관계가 쉽게 단절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중수교 이후 사회문화관계는 이러한 정치적·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정치외교관계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정치외교적 갈등은 사회문화교류를 약화시켰다. 특히 북한 내부 정치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적극적인 사회문화교류 지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대폭 감소하였다. 2000년대는 정치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점차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는 추세가 감지되었다. 일종의 복원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관리(관여)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회문화교류

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마지막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정치관계가 조정기로 진입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시기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으로 인한 정치관계의 일시적 경색은 국가 차원의 사회문화교류의 사실상 중단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교류는 북중관계의 기본적 토대라는 전통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방정부나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전통우호 혹은 영리적 목적을 바탕으로 지속·유지되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 역시 정치외교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관계는 사회문화교류와 마찬가지로 분야의 고유한 특징이 있었다. 경제관계는 정치적 요소 외에도 국제 경제의 메커니즘이 영향을 미쳤다. 정치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경제환경에 따라 경제관계가 형성되고, 변화의 동학 역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교역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무역교역이라는 것은 주로 상품들이 오고 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상품, 자원이 필요하거나, 혹은 북한이 중국의 상품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국가 간 정책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를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시장 논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경제관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었다. 1990년대는 불안정기로 정치외교환경의 영향으로 북중교역의 부침이 심하였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유일한 후원국이 중국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북중교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던 반면, 한중수교 및 북한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북중교역이 급속도로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북중 경제

I
II
III
IV
V

관계는 1990년대의 요소 모두가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어 나타나면서 안정화기에 진입하게 된다. 북중 정치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의 경제 위기 역시 일정 부분 진정됨에 따라 북중교역이 질과 양의 측면 모두에서 비약적인 증대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접근과 남북경협을 전략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의외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기의 경제관계는 북중교역만이 유일한 변수로 남아버린 전일화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는 북중 양자관계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5·24 조치였다. 5·24 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은 기존의 북한지지 교역구조의 핵심이던 한국이 배제되면서 유일한 북한의 후원국으로 중국이 남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북중교역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의 악화(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등), 북중교역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북중 경제관계의 성장세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각 관계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북중관계의 각 영역별 발전 추세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V-1 >> 분야별, 시기별 북중관계의 특징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치외교관계	갈등	협력	조정
사회문화관계	약화	복원/강화	관리
경제관계(무역)	불안정	안정화	전일화

출처: 저자 작성.

각 시기를 구분하는 분야별 표현이 다른 한계는 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 논의를 생략한다. 시기를 특징짓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흐름의 추세를 비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V-1>을 보게 되면, 1990년대의 경우 정치외교관계가 갈등으로 치닫자, 사회문화관계 역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관계는 불안정기로 특징을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0년대 초반의 북중 무역관계의 급성장은 사회주의권 경제의 몰락이라는 변수가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중수교 및 북한의 고난의 행군 등의 변수가 감안된 결과는 1990년대 후반 무역관계가 급하락하는 현상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상호 분야별 관계는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외교관계가 협력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문화관계와 경제관계 역시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사회문화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부터 새로운 대북 관리(관여) 정책의 영향으로 약 3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었다. 경제관계 역시도 대체로 안정화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변인이 단순히 정치관계 변화의 영향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북한의 경제적 후원국 역할을 하는 북한교역 지지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는 3차 핵실험 이후 국면으로 시진핑과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이해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조정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 정치 인사들의 교류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문화관계 역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국가 단위의 관방성 사회문화교류는 역시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지방정부나 민간 상업성 교류는 여전히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 간 관리적 측면이 강하

I
II
III
IV
V

다고 할 수 있다. 경제관계는 조금 다르게 전환기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북한이 처한 국제경제환경과 북한교역 지지구조의 붕괴라는 구조적 요인들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외 무역에 있어 유일한 루트로 중국만이 남아버린 상황이다. 결과로만 본다면 2010년대의 특징은 북중 정치, 사회관계의 전반적 추세는 악화되었지만, 오히려 경제관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호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정치사회관계의 변화보다는 국제경제환경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북중 정치외교관계는 사회문화 및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치외교관계에 비해 사회문화와 경제 분야는 분야 고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북중관계에 있어 사회문화관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우의와 역사성이라는 핵심적 요인이 근저에 있었다. 정치관계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사회문화관계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이유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회문화관계에 국가부문의 색깔이 점차 멀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단위나 민간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자발적인 수요에 따라 사회문화교류를 진행시킨다는 점이 새로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계 역시 물론 정치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관계의 변화가 곧 경제관계의 변화를 추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경제관계는 표면적인 통계로는 하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협력, 혹은 북중 정치관계의 냉각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통계 결과치에는 경제무역구조, 중국과 북한의 자체적 경제 수요 공급의 변화 등의 요인이 더욱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이 변화에는 경제 논리가 더욱 작용하고 정치적 이유는 다소 부차적인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시기의 특징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북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비록 각 분야별 시기 구분을 하고, 그 시기별 특징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현을 특정하였으나, 사실 각 시기별로 협력과 갈등 혹은 강화와 약화의 측면이 공존하였다. 이는 북중관계를 규정하는 이벤트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벤트의 파급효과로 일시적 관계 경색, 회복, 강화 등의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중관계는 관계가 매우 경색된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그 갈등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는지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특징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정책적 시사점

북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모두 포함된 딜레마를 안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변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 통일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반응이 어우러지면서 협력과 갈등의 사이클이 순환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는 변화보다는 지속적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중관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향후 북중 양국이 비핵화를 둘러싼 정책 이견을 조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북중관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실 정책적 측면이나 연구적 측면 모두에서 북중관계의 향후 전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중관계의 변화에 종속된 소극적 대응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

I
II
III
IV
V

이면서 창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북중관계의 약화가 강화보다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통일에 유리할 것이란 해석보다 북중관계의 변화가 미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북중관계의 전개와 발전 추세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정치 외교관계 측면이다.

첫째,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의 딜레마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대립구도가 강화될수록 중국 내부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유효하게 평가하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론’이 우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및 한국과의 협력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보유국화 시도나 도발 등 북한의 행위가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전략적 부담(strategic liability)론’이 우세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 및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으로 인한 중국의 국익 침해 방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상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전략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의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

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양자 차원에서의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동기가 약하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우리의 대응 및 정책을 설정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대북제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는 중국의 역할을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드시 중국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사고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력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가 제한적인 바, 국제공조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지속적 제재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성실하고 실질적인 제재이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찬성한 것처럼, 대북제재의 이행에도 국제사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미일 등과 공조해 압박하는 한편, 유엔을 통한 중국의 제재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차 핵실험에 따른 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강조했던 예외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중국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 무역기업인 홍양기업 조사와 같은 미중 사법공조의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협력 및 간접적 압박이 중요하다.

넷째,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한중관계의 관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북핵문제로, 한국과는 사드문제로 갈등을 노정하면서 기존 한반도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I
II
III
IV
V

세계적 실패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만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조합해 한중협력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은 여전히 한중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 방지 및 지속 이행 국면을 조성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중관계의 협력 및 갈등 구도를 주시하며 이를 활용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탈을 방지하고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사드를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미일 대 중리의 안보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리의 구도로 전환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의 3자 대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미중이 공감하고 있고, 사드문제에 비해 북핵문제는 상호 타협의 여지가 있는 만큼, 미중 간 이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통해 중국의 제재이탈을 방지하고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중 사회문화관계의 발전과정이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첫째, 북중 사회문화교류의 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고 있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북한 역시도 중국을 통해 변화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살펴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북한 기술인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벼 재배 기술, 벼섯 양식 등 전문기술을 학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의 정책법규·관리경험 등 전반 운영시스템도 동시에 학습 중이다. 특히 신문기자단의 중국 방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도 중국문화체제 개혁 현황, 중국의 경공업 발전 및 신농촌 건설, 특구개발 경험 등 북한이

최근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정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관계 분야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중 사회문화관계는 이미 국가 대 국가라는 협력의 틀을 벗어나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지방정부들까지 사회문화교류의 행위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이 10여 년간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의 북중경협 원칙을 유지해 온 이래, 북한도 이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면서 중국 기업체들과의 협력관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인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들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중 사회문화교류의 지속성은 향후 북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내에는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의 사회교류와 문화 접촉을 유지·관리·강화해 나가려는 내적 동력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중국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한류’를 단지 문화상품 형태로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북핵·통일한국 등 남북 이슈와 결부시켜 중국 내 사회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문화전략을 짜야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향수’ 심리를 갖고 있는 중국 중장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에 대한 친화감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문화전략들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북중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들과의 경제·사회문화교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북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경제성장 속도가 느린 지역에 속한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국경지역 개발협력이 대부분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들 지역은 북핵 위기의 2차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동안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I
II
III
IV
V

연해지역 및 서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을 뿐,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충분치 않았다. 동북지역에 대한 경험 및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중 경제관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대북정책 및 정치외교 관계의 변화가 경제적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정도 북중 정치외교관계의 냉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교류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논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북중 경제관계의 장기적 흐름을 고찰한 우리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북중 정치외교관계의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화관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국이 공히 상호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바, 표면적으로 정치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심지어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도, 민간 영역의 상업 논리는 사회문화교류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 차원에서의 경제교류는 아무리 정치관계가 냉각되었어도 양국 모두 이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근본적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은 특정 분야나 광물자원 같은 일부 상품 교역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즉 무역구조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북중무역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북중 경제관계를 활성화시켜 향후 남·북·중·러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려 한다면, 양자 경제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중·러 협력의 즉각적인 확대는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북중 무역구조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남는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우리가 강하게 중국에게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품목(광물, 인적자원) 교류 등에 대한 중단을 유도하는 전략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전략적 우려에 대한 해소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의 무역 행태를 보게 되면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후원국 찾기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후원국이 된 형국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 증대의 역설 상황에 빠져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 대북 제재는 곧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을 끊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북한 체제 불안정 혹은 정권 붕괴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안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전략적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준영 외. 『그레이트 차이나』. 서울: 대선, 2011.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리아, 2013.
- 이교덕 외. 『북중 간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석. 『북한의 사회경제통계 분석과 재구축』.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이석 편.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최수영 외.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향』.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3-2014』.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 UNDP.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AREP)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ew York: United Nations, 1998.
- 金祥波. 『朝鮮對外戰略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劉金質 外.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匯編 (1991-2006):上』.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 劉金質·楊淮生.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949-1994 (1-5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楊紹全·孫豔妹. 『當代中朝中韓關係史』 (1-2冊). 長春: 吉林出版集團, 2013.
- 外交部政策研究司.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 _____.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 陳峰君·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2.
- 崔誌鷹. 『大國與朝鮮半島』. 香港: 卓越出版社, 2000.

2. 논문

- 박동훈·이성환.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신핑 시대의 대북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8권 제1호, 2015.
- 이석.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북일·남북교역.”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
연구원, 2008.
- _____.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 정책
포럼』. 제212호, 2009.
- _____.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2010.
- 이정남.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 전병곤. “중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연구회
여음.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외대출판부, 1996.

최명해. “2013 북중관계 동향과 향후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역음. 『2013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4.

황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소개된 중국인민의 문학예술.” 『신조선』,
6월호, 1955.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Thesis, Northern University USA. 1992.

Kim, Woon Keun, Hyunok Lee, and Daniel A. Sumner.
“Assessing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6, no. 3. April
1998.

廖小娟. “中共與北韓的雙邊關係:以兩次核武危機的處理檢視.” 『展望與探索』,
第3卷 第5期, 2005.

馬方方. “論中國周邊安全中的中美‘分歧管控’.” 『和平與發展』, 第6期, 2015.

3. 기타자료

『노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德陽市科普資源網』.

『東方文創網』.

『新華網』.

『人民日報』.

『人民網』.

『朝日新聞』.
『中國高校之窗』.
『中國科學院網頁』.
『中國記協網』.
『中國文化報』.
『中國新聞網』.
『中國振動機械網』.
『中國包裝網』.
『中視網(CCTV)』.
『華夏經緯網』.

배정호·박영호·전병근.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15, 2010.5.18.

전병근. “김정일 이후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개원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12.4.6.

_____. “천안함 침몰 사태와 중국 외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0-21, 2010.5.31.

U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HRI).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Symbol: HRI/CORE/1/Add.108/Rev.1. July 16, 20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www.kotra.or.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www.aqsiq.gov.cn>.
中國國家旅遊局. <www.cnta.gov.cn>.
中國文化部. <www.mcprc.gov.cn/>.
中國駐朝大使館. <kp.china-embassy.org>.
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部. <www.most.gov.cn>.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www.mofcom.gov.cn>.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www.fmprc.gov.cn>.

4. 관련 자료 목록

- 김병로 외.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8.
- 김병연 외.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 문홍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중소연구』. 제27권 3호, 2003.
- 박두복.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3.
-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 박정동.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 비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6.
- 배종렬 외.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신상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변화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2001.
- 전병곤 외.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1985.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서울: 선인, 2006.
-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서울: 오름, 2009.
- 최수영. 『북중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통일연구원.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한상국.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3.

Jian, Che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no. 115. September, 2003.

郭銳·蘇紅紅. “‘朝鮮式特區經濟’與中朝邊境經濟區合作.” 『亞太經濟』. 第2期, 2013.

金鑫. “淺析當代中朝經貿發展(2000年至今).” 『中國商貿』. 第17期, 2014.

李憲京·詹德斌. “中國經濟發展帶給朝鮮的啟示.” 『學海』. 第1期, 2010.

聲揚. “試論朝鮮停戰至中國文革前的中朝關係.” 延邊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11.

王紅信. “朝鮮經濟發展的困境與對外‘開放’的探索.” 『大眾商務』. 第2期, 2010.

朱鈺彭徽. “遼寧與朝鮮區域一體化問題淺析.” 『商場現代化』. 第5期, 2015.

焦朝霞·孫娜. “構建黃金坪經濟合作區促進邊界效應轉化的實證分析.” 『對外經貿』. 第2期, 2015.

沈志華. “面對歷史機遇: 中美關係和解與中朝關係(1971-1974).”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2014.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수,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 도시정치 · 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순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 사회 · 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재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보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중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